

대한민국 안전보장 진단과 대책!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재)여의도연구원

주관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목 차

축 사 • 이 정 현 새누리당 당대표 5

축 사 • 김 영 우 국회 국방위원장 6

환영사 • 김 종 석 여의도연구원장 7

제 1 주제

[발 제]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향 9
김 정 봉 한중대 석좌교수

[토론 1] 김 태 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55

[토론 2] 권 혁 철 합동참모대학 교수 59

제 2 주제

[발 제] 미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63
김 현 옥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1] 이 서 영 국방대 안보대학원 초빙교수 83

[토론 2] 이 상 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87

축 사



이 정 현
새누리당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전보장 : 진단과 대책’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님, 이흥기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님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국가 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및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일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듭되는 핵실험을 통해 그 위력도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보다 실효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안보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안보 국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굳건하게 수호하는 안보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가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새누리당 당대표 이 정 현

축 사



김 영 우
국회 국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입니다.

국가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북핵 위협 대비와 미래 한미동맹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최하신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님과, 세미나를 준비하고 주관하신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흥기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에 나서시는 안보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안보위기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에 맞춰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핵실험 위력은 10kt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역대 북한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의 폭발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각종 미사일 실험으로 도발을 수십 차례나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특히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논의 등 외교·안보분야의 변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최악(最惡)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最善)이라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국가안보의 당면한 문제인 북핵 위협 대비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에 대해 훌륭한 정책제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제언들을 토대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철통국방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회 국방위원장 김 영 우

환영사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먼저 국방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개최하는 ‘대한민국 안전보장: 진단과 대책!’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여의도연구원과 한국융합안보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이 처한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유동적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꾸준히 증강하고 있으며, 동북아 각국은 지역내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은 융복합적 차원의 대비를 통한 혁신적인 안보역량을 갖춰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적보다 압도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역비대칭 전력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따라잡기식’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이고 융복합적인 안보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한국융합안보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안전보장: 진단과 대책!’ 주제로 안보발전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안보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 겸비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만큼, 올바른 정책을 위한 등불이 되는 훌륭한 제언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대한민국 안보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김 종 석



제 1 주제 발제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향

대한민국 안전보장 진단과 대책 자료집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목 차〉

- I. 서 론
- II. 융·복합적 대응의 개념과 핵무기
- III.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 IV.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실태
- V.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향
- VI. 맺는 말



제 1 주제 발제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향

김 정 봉
한중대 석좌교수

I 서론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폭발력은 제1차 핵실험 때보다 10배로 강해졌다. 북한은 핵탄두 폭발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물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구두로만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번에는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폄하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에 핵폭탄을 적재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폭탄 위협 아래에 살면서도 늠름하고 당당하다. 어떨 때는 이 같은 안보 불감증이 고마울 때도 있다. 북한의 핵 공갈협박 전략이 먹혀들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견 아니다 싶다. 핵폭탄 1발에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국가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에는 정부와 군대도 한 몫 단단히 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 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잡기만 열을 올렸다. 마치 여당 야당 싸움질할 때 서로 흠집잡기 하듯이 말이다. 보수 정부는 안보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보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군은 막을 방도가 없노라고!’, ‘그래서 사드를 서둘러 배치하려 한다고!’

정부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왔다면 사드배치를 둘러싼 개그콘서트가 공연됐겠는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는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주장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

난 9월 13일 미국의 성김 특별대표는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함으로써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 무기이니 한반도 재배치(비핵화 파기)가 싫어서 미국이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마음'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치 예기'라면서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의역하자면 '미국은 당연히 반대'라는 뜻 일게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내 주장에 대해 득실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 논문은 II장에서 융합과 융·복합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 목표와 융·복합적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III장에서는 북한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IV장에서는 북핵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겠다. V장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융·복합적 대비방향을 국가 전체, 군대, 외교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문제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VI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논문을 끝맺도록 하겠다.

II 융·복합적 대응의 개념과 핵무기

1. 융·복합의 개념과 융·복합적 대응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세분화되지 않았다. 신학과 철학, 그리고 과학이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였다. 한 위대한 철학자는 과학자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사회학, 철학, 생물학, 의학 등 당시 수준에서는 전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남긴 발자취는 후대 사람들에게 진리는 과거에 있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년-1519년)는 비범한 화가였을 뿐 아니라 조각가, 시인, 음악가, 건축가였다. 그는 예술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현재 전해져오는 그의 수기 원고는 책으로 25권, 분량으로 7천여 쪽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술은 물론 대자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치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한 내용이 글과 그림으로 기록돼 남아 있다. 소재 역시 해부학, 동물학, 공기역학, 건축학, 의상 디자인, 군사 프로젝트, 화석 연구, 물 연구, 수학, 기계, 음악, 광학, 철학, 로봇, 점성학, 천문학, 무대 디자인, 도시 계획 및 포도 재배 등 광범위한 분야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점차 학문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17-18세기에 등장한 계몽사상은

인간이 이성에 의해 보편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다. 학문들은 세분화 전문화되고 엄청난 지식이 축적되었다. 이 같은 추세는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부터 세분화된 학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학제 간 융합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자각이 뒤 따랐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학문연구의 경향은 융합적 연구의 유용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학문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융합의 개념이 태동하게 된다. 학문분야가 다학제 학문에서 학제간 학문으로 발전하였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독자성을 갖는 신융합학제가 탄생되어 주류학문의 일종으로 인식되게 되었다.¹⁾

그렇다면 융합이란 무엇인가? 현재 시점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융합의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융합(融合)이 사회 모든 분야를 통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학문적으로 융합에 해당하는 것은 ‘통섭’(統攝, consilience)으로서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킨 법칙이나 이론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²⁾ 한국의 학계에서 융합을 사용한 것은 공학의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를 결합하여 발전시킨 기술, 즉 "convergence technology"를 "융합기술"로 번역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convergence는 두 개의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수렴’(收斂)을 뜻하는 것으로 '융합'과는 뜻이 다소 다르다.³⁾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융합의 개념은 “미국에서 창안된 수렴테크놀로지의 한국적 해석과 통섭 개념 그리고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이해가 암묵적으로 융합된 것이며 사용자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여 지면서도 통용되는 개념”⁴⁾이라고 한다.

이흥기는 융합(融合)의 한자를 破字하여 融이란 礬(솔)+虫(식재료)를 뜻하므로 융합이란 “솔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끓여서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했다.⁵⁾ 이를 바탕으로 이흥기는 ‘융합’을 “독자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논리와 개체들을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21세기 안보위협의 3대 특징은 “군사적 위협, 인위적 재난, 자연재난, 악성 기후변화 등이 망라되는 포괄성”, “위협의 행위자, 영향지역, 위협의 현실화 시 파괴력 등 측면에서 다차원적 특성”, “위협의 주체가 갖는 파괴력은 막대하나 대처하는 방어력은 제한되는 극심한 비대칭성”을 갖는다고 한다.⁶⁾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21세기 안보위협에 대해 기존의 안보

1) 박상욱, 2012, “개발도상국 국가혁신시스템 성숙도 측정의 효과성 분석”(한국정책학회), 26쪽.

2) 최현철, 2015, “융합의 개념적 분석,” 『문화와 융합』, 제37권 2호, 16쪽.

3) 상기 논문, 16-17쪽.

4) 이정모, 2010, “미래 융합과학기술과 인지과학의 연결”(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쪽.

5) 이흥기, 2016, “포괄안보시대 융합적 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한국융합안보연구원), 10쪽.

6) 상기 논문, 15-18쪽.

기재의 대응방식은 안보위협을 제어·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그 이유는 ① 분절형 대응방식으로는 안보기재들의 틈새가 있어 다차원적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이 어렵고 ② 통합시스템이 부실하여 가용 투입량은 충분하나 실제 투입량은 부족하게 되는 유통의 악순환 구조이며 ③ C2(Command&Control)의 작동이 미약하여 투입된 만큼 효율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융합적 대응을 해야 하는 데, 윤민우·김은영은 현 시대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융합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⁸⁾ 융합적 방식의 안보란 “안보에 대한 기존의 분절적(分節的)이고 관료적인 접근에서 통합적,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적 대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기존 국가권력이 미치지 어려운 사이버공간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한다.⁹⁾

이흥기는 “융합안보는 국가 또는 국가의 중앙기관이 국가주권과 영토를 방위하고 국민안전과 국가기반체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이고 치명적인 군사 및 비군사 위협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과 수단의 융합을 통하여 획득된 고효율의 정책, 자산, 능력을 투사하는 안보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융합안보란 “포괄성, 다차원성, 비대칭성을 갖는 21세기적 안보위협에 대해 통합적,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안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한편 ‘복합’이란 무엇인가? 복합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다. 즉 복합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물리적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큰 틀 속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¹¹⁾

그렇다면 ‘융·복합적 대응’이란 무엇인가? ‘융·복합적 대응’이란 ‘융합적 대응’과 ‘복합적 대응’이 합쳐진 용어인데, ‘융합적 대응’이란 한마디로 ‘통합적 대응’이고, 복합적 대응’이란 “큰 틀 속에서 각 요소들이 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융·합복적 대응이란 “통합된 대응 속에서도 각 요소들이 각 맡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융·복합적 대응’이란 용어는 ‘융합적 대응’이라는 용어와 차별성을 두기 어렵기에 ‘융·복합적 대응’과 ‘융합적 대응’을 때에 따라서는 유사성을 갖는 용어로 사용토록 하겠다.

7) 이흥기, 상기 논문, 22-23쪽.

8) 윤민우·김은영, 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172쪽.

9) 상기논문, 172-173쪽.

10) 이흥기, 2016, “융합안보의 개념설계와 구현방향,”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창립 세미나 논집』, 52쪽.

11) 이흥기, 2016, “포괄안보시대 융합적 안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한국융합안보연구원), 7쪽.

2. 핵무기의 위력과 피해 정도

현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핵무기 이전의 무기와 핵무기로 대별된다.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핵무기 이전의 무기는 재래식 무기라고 불린다. 핵무기는 너무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되었을 경우 도시 전체 또는 도시의 일부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원자폭탄이 실제 사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였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명령하여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가 히로시마에, 3일 후 8월 9일 "팻 맨"(Fat man)이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히로시마에 약 16KT의 폭발력을 가지는 우라늄 탄인 리틀보이, 나가사키에는 약 20KT의 폭발력을 가지는 플루토늄 탄인 팻 맨이 투하되었다. 이 원자폭탄 두 개는 인류사 최초로 전쟁에서 일반 시민 학살에 쓰인 원자폭탄이었다.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된 히로시마는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이면서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였으며, 일본의 군사상으로 중요한 근거지였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초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히로시마에서는 90,000명에서 166,000명, 나가사키에서는 60,000명에서 80,000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 가운데 각 도시 사망자 절반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당일에 집계되었다. 히로시마 의료기관은 원폭투하 탓으로 사망자의 60%가 섬광화상으로, 30%가 건물 잔해물로, 10%가 기타 원인으로 죽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가 있는 후 다음 달에 더 많이 죽었는데 이는 원폭투하 탓에 후폭풍, 피폭, 기타 질병 합병증과 부상 탓에 발생했다. 미국에선 이 사건이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시민을 죽였다고 평가하였다. 사망자의 15%에서 20%가 피폭으로, 20%에서 30%가 섬광화상으로, 50%에서 60%가 질병과 부상으로 죽었다.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보통 시민들이었다.

나가사키 원폭투하 6일 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며, 9월 2일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다.¹²⁾

한편 미국과 한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서울에 투하할 경우 발생할 피해의 정도를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자료에 따르면 만약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같은 폭발력을 갖는 10KT 정도의 핵폭탄을 서울에서 폭발시키면 최소 18만 명의 사망자와 16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사망자 18만 명 가운데 10만 명은 핵폭발 당시에 사망하고 나머지 8만 명은 낙진 피해로 사망한다고 한다.

미국의 국제천연자원보호협회(NRCD)가 2004년 미국 국방부에 제출한 한반도 가상핵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삼각지 상공에서 15KT의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500미

12) 위키백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터 상공이면 62만 명, 100미터 상공이면 84만 명, 지면폭발이면 12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모의 실험한 자료에서도 20KT급 핵무기가 지면에서 폭발할 경우 1.2km내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고 한다. 24시간 이내 90만 명 사망과 136만 명의 부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낙진에 의한 추가 피해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¹³⁾

한편 현재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1MT급 핵폭탄이 서울에서 터지면 전국에서 1000-1200만 명이 죽고, 서울 건물의 80-90%가 파괴된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직후에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폭발력이 너무 낮아 수소폭탄이라기 보다는 증폭핵분열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수소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구소련은 1961년 10월 30일 ‘짜르 봄바’(Tsar Bomba)라는 별명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 소비에트 연방 북극해에 있는 노바야제믈라 제도에서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 폭탄은 현재까지 폭발한 가장 큰 폭탄으로,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폭발력은 50MT급이다. 1961년 7월 10일 니키타 흐루쇼프 소비에트 연방 총리의 지시에 의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품을 활용하였기에 설계와 제작에는 겨우 14주 만이 소요되었다. 폭탄의 무게는 27톤, 길이는 8미터, 지름은 2미터였다. 폭탄 투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800kg 무게의 낙하산을 이용해서 투하되었다.

투플레프 Tu-95 폭격기를 이용하여 고도 10,500m에서 투하되었다. 폭탄은 기압센서를 이용하여 지면으로부터 4000m (해발 4200m) 높이에서 폭발하였다. 폭발의 화구는 지상에 까지 닿았고, 위로는 폭탄이 투하된 비행기의 고도까지 닿았다. 비행기는 이미 45km 밖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였지만 폭발은 1,000km 바깥에서도 보였고, 폭발 후의 버섯구름은 높이 60km, 폭 30-40km까지 발생했다. 피해범위는 100km 바깥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이 발생했고, 후폭풍은 1,000km 바깥에 있는 핀란드의 유리창을 깨 정도였다. 폭탄에 의한 지진파는 지구를 세 바퀴나 돌았다. 차르 봄바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보다 3,800배 이상 강했다.

한편 미국이 제작한 가장 큰 핵폭탄(B41 핵폭탄)은 25MT급이며, 미국이 실험한 가장 큰 폭탄은 15MT급(1954년 캐슬 브라보) 이었다.

3. 북한의 핵위협 목표와 응·복합적 대응의 필요성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재래식 전쟁은 군대와 군대 간의 전투가 주이고, 민간인은 전쟁에서 주 타격 목표가 아니었다. 재래식 전쟁에서는 상대

13) 김태우, 2010, “북한 핵실험과 확대억제 강화의 필요성”, 백승주 외, 『한국의 안보와 국방』(한국국방연구원), 319쪽.

방 군대를 공격하여 굴복시킨 후 항복을 받아 내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물론 과거에도 전쟁이 발생하면 민간인도 막대한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민간인이 주 공격목표는 아니었다.

현대전에서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이 사용됨으로써 후방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해졌다. 전방지역에는 적군이 탱크 등 중화기를 배치하고 방어진지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어 쉽사리 돌파가 어려우므로 적의 전방부대와 일반국민, 주요 산업시설, 그리고 후방지역에 있는 국가 수뇌부나 전쟁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하는 ‘병행공격이론’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병행공격이론’은 1990년대 미 공군대령 워든(John A. Warden, III)이 “5원 모델”(Five-Ring Theory)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워든은 전투기재(fighting mechanism) ⇒ 주민(population) ⇒ 기반요소(infrastructure) ⇒ 조직의 핵심요소(organic essentials) ⇒ 지도부(leadership)로 이루어진 5가지 동심원에 대해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전쟁승리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제시했다.¹⁴⁾

그런데 핵무기가 사용된 전쟁에서는 적대국의 핵심전략 목표가 있는 지역을 겨냥하기는 하지만 군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과 도시 전체가 공격목표가 된다. 핵무기가 사용되면 전쟁지휘부가 있는 지역을 직접 겨냥할 것이므로 제대로 목표지역에 핵폭탄이 투하된다면 전쟁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살상력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대규모로 희생되고 산업시설 등이 모두 파괴되게 된다. 핵무기는 위에서 워든이 제시한 5가지 전쟁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현대전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이상적인 무기이다.

핵무기가 실제 사용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핵투하는 1945년 8월까지 전쟁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던 일본의 전쟁지휘부가 항복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으로 90,000-160,000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었고, 히로시마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2발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략과 다르지 않다.

김태우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대내적 후광효과(halo effect), 대남용 그림자 효과(shadow effect), 대미용 동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 등 3대 효과를 갖는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였다.¹⁵⁾

김정은은 2012년 8월 25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원산에서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7일 전쟁-신작전계획’을 승인했다.¹⁶⁾ 당시 회의에는 김정은을 포함하여 당 중앙군

14) John A Warden, III, “The Enemy As a System,” *Airpower Journal*, Vol. 9, No. 1 (1995 Spring).

15) 김태우, 2015, “한국의 북핵 억제전략: 응징, 방어 그리고 선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미나), 105쪽.

16) 중앙일보, 2015년 1월 8일.

사위원회 위원 전원과 군단장급 이상이 모두 참석했다. 신작전계획의 골자는 북한이 기습남침을 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미군이 본격 개입하지 못하도록 7일 안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작전계획에는 핵과 미사일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신작전계획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전쟁 초기에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적화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김정은은 開戰 시부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등 대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여 대규모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우리의 전쟁지속 의지를 꺾음으로써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한다.

북한의 전쟁 도발이 재래식 군사력 사용과 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이 동시에 전장화하게 될 것이며, 북한군의 전쟁목표는 청와대와 우리 군의 전쟁지휘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노리는 것은 군 지휘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과 산업기반 시설이 있는 도시 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의 타격범위는 한반도 전역에 미치므로 대한민국 국토 전역과 국민 전체가 북한의 타격목표가 되고 있다.

핵무기는 공격목표가 포괄적이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백만 명 희생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성 낙진 피해로 온전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deterrence)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사용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핵기지와 전쟁지휘부에 대한 선제타격 및 응징보복 작전을 실시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핵 대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전형적인 ‘총력전’(Total War)¹⁷⁾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도발 책동에 대비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을 다한 우리의 대응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응의 방식이 융·복합적이어야 한다.

박휘락은 독일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삼위일체론’(Trinity)¹⁸⁾을 인용하면서 국민, 군대, 정부의 일체화된 대비를 강조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광의의 국민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면서 통합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총력성이 적을수록 군대가 전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들은 전쟁의 결과에 의하여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측면이 크고, 총력성이 클수록 국민들까지도 전쟁의 과정에 관

17) 총력전은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장군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1935년에 『총력전론』(Der Totale Krieg)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총력전이라는 용어가 유래하고 있다고 한다.

18)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ret, indexe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89쪽.

여하게 된다고 한다. 박휘락은 “총력성이 커진 핵전쟁이라면 국민들의 전쟁 참여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군대-국민들의 전쟁수행 노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수행한 역할들의 결과가 더욱 철저하게 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① 분절형 대응 방식으로는 안보기재들의 틈새가 있어 다차원적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이 어렵고, ② 통합시스템이 부실하여 가용 투입량은 충분하나 실제 투입량은 부족하게 되는 유통의 악순환 구조이며, ③ C2(Command&Control)의 작동이 미약하여 투입된 만큼 효율을 내지 못하기 때문¹⁹⁾에 “통합적,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융합안보적 대응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적 대응 속에서도 “각 요소들이 각 맡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적 대응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1.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과 핵능력²⁰⁾

(1) 핵탄두 보유량

① 플루토늄 보유량과 플루토늄 핵탄두 수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5년 4월 14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약 4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부터 영변의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여 2016년 4월 경 폐연료봉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²¹⁾되었다. 이 폐연료봉들이 모두 재처리되었다면 10-12kg의 플루토늄이 추가 획득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총량은 약 50-52kg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한 발 제작에 4kg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이 보유 가능한 플루토늄 핵폭탄 수는 약 12-13발 정도가 될 것이다.

19) 이흥기, 상기 논문, 22-23쪽.

20) 이 논문의 주목적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에 있으므로 핵탄두 보유량에 대한 필자의 소수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본 논문의 논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핵탄두 보유량은 일반론을 따르기로 한다.

21) 연합뉴스, 2016년 4월 6일 00:20.

② 우라늄 탄 보유량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추정하는 것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거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 논문에서는 2010년 11월 미국의 헤커 박사(Sigefried Hecker) 일행이 영변에서 직접 목격한 원심분리기 2,000기와 2014년 완공된 기존 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추정되는 2,000기에서 추출된 고농축 우라늄 량만으로 우라늄 탄 보유량을 산정하기로 한다.²²⁾

영변의 2,000기 원심분리기에서 매년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8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추출한 고농축 우라늄 총량은 다음과 같다.

$$6년 \times 40kg = 240kg$$

$$2년 \times 80kg = 160kg \quad \text{합계} \quad 400kg$$

우라늄 핵탄두 한 발 생산에는 일반적으로 20-3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소요된다.

평균 25kg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13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북한이 3차 핵실험부터 4차, 5차 핵실험을 모두 우라늄 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남은 탄두 수는 10발 정도로 추정된다.

③ 북한의 총 보유 핵탄두 수²³⁾

플루토늄 탄 12-13발과 우라늄 탄 10발을 합하여 총 22발에서 23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6년 9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교수 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 연구원인 헤커 박사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현재 300~400kg인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에, (매년) 핵무기 6개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150kg 가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7개 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것은 전병호 당 군수공업비서가 황장엽 당비서에게 언급한 것처럼 1996년부터 추정된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북한이 2002년도에 이미 3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미국의 관리 2명은 북한이 2002년에 이미 산업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에 2003년 2톤의 6불화우라늄을 수출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된 것은 2005년 9월경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해 가스화하기 위한 전 단계 재료인 6불화우라늄을 해외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미루어 보건 데 이미 2002년경에는 북한이 자국 내에서 쓰고 남은 만큼 많은 양의 6불화우라늄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연합뉴스, 2016년 9월 13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교수 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 연구원인 헤커 박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현재 300~400kg인 고농축우라늄 보유분에, 핵무기 6개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150kg 가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추가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7개 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6년 7월 26일 중앙일보는 익명을 원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약 5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0기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연간 생산능력은 50-200기이며, 평남 개천 118호 공장에서 미사일을 최종 조립하고 있지만 전국 100여 곳에서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최종 조립공장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 미국의 물리학자이면서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올 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북한이 2016년 6월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²⁴⁾ 2015년 초에 올브라이트 박사는 북한이 2020년에는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적도 있다.²⁵⁾
- 중국의 핵전문가들은 2015년 2월 미국 전문가들(지그프리드 헤커 스텐포드대 교수도 참여)과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개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추정하였다고 WSJ이 2015년 4월 22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전문가들의 추정치 10-16개 보다 많은 것이다.²⁶⁾ 결국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간 20발의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2014년 2월 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0~20개, 전체적으로는 중간 값을 취할 경우 대략 20기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43개 수준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한 약 70기 수준에서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900기 내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5년 후에는 1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의 완전한 운용을 통해 핵전력을 확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2015년 2월 24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Joel Wit)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모임에서
 - 북한이 보유한 현재의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 예측 경로를 ①저성장 시나리오 ②중간성장 시나리오 ③고성장 시나리오로 구분한 후,
 -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 중간성장 시나리오에서는 50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100kt의 폭발력을 가진 1단계 열핵(핵융합)폭탄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 미국의 대표적 북핵 전문가의 한명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3월 14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북한 핵무기 60%가 우라늄탄”이라고 밝히고
 -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15~16개의 핵무기 가운데 8개(원심분리기 2개 가정)가 HEU에 기반한 핵폭탄”이라고 강조했다.
 - 이는 북한이 2020년에 이르러 핵무기를 100개 제조한다고 가정할 경우 60개가 우라늄탄이 된다는 의미다. 올브라이트 소장과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히 “북한이 영변 이외의 비밀장소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이미 추정하고 있다”며, “탈북자들로부터 비밀장소일 가능성이 큰 지역 3곳의 이름을 들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2) 수소폭탄 개발 여부

북한 실시한 5차례 핵실험 위력은 다음과 같다. 2006년의 제1차 핵실험 규모는 1kt 이하이다²⁷⁾. 사용된 플루토늄량은 4kg정도로 추정되며 2차 핵실험에서도 4kg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²⁸⁾

2009년 제2차 핵실험 규모는 3-4kt로 추정된다.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규모는 7.9kt(지진파 4.9)로 평가된다.²⁹⁾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시 규모는 6kt(지진파 4.8)로 제3차 핵실험 때 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³⁰⁾ 2016년 9월 9일 09시(북한 표준시)에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은 진도 5.04로 10kt정도의 폭발력이 나타났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에서 핵폭발의 위력이 10kt을 넘지 못해, 핵무기의 위력 증가가 최대의 과제였다. 핵폭발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폭핵분열탄³¹⁾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폭핵분열탄은 기존 핵무기의 위력을 대개 2-5배 증강시키고, 최대 10배까지 증강이 가능하다.³²⁾

2010년 5월 북한의 핵융합 실험 주장이 있었다. 2010년 5월 12일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은 핵융합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시점에 CTBTO³³⁾ 관측소에서 북한의 핵융합을 의

24) David Albright and Serena Kelleher-Vergantini,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at the Yongbyon Nuclear Site," *Imagery Brief*(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June 14, 2016), p. 1. 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Pu_HEU_and_tritium_production_at_Yongbyon_June_14_2016_FINAL.pdf(검색일: 2016년 8월 23일).

25) David Albright,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pp.19-30.

26) 조선일보, 2015년 4월 24일.

27)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1시간 전 북한은 중국에 4kt폭발력의 핵실험을 할 것으로 통보.

이는 북한이 핵 폭발력을 1차실험 때부터 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 공동을 크게 파서 핵실험을 했을 경우 지진파가 실제 크기보다 작게 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kt보다 폭발력이 컸을 가능성도 있음.

28) 플루토늄 량을 늘려 핵폭탄의 위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핵장치나 전체 디자인의 설계 변경이 요구되므로, 2차 핵실험에서는 4kg수준을 유지하면서 폭발력을 늘려나간 것으로 추정

29) 제3차 핵실험의 경우 위력이 20kt이라는 평가도 있음.

30) 2016년 2월 1일 연합뉴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6일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3차 핵실험(위력)은 7.9kt, 지진파 규모는 4.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위력이) 6.0kt,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고 지적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소탄' 폭발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4차 핵실험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1) "증폭핵분열탄(핵무기)은 통상 소량의 핵융합물질을 사용하여 여분의 중성자를 발생시켜 핵분열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핵폭발의 위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핵물질의 순도가 낮은 Pu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발 핵분열(spontaneous fission)에 의한 핵폭발 위력의 극단적인 감소(fizzle effect)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핵융합반응을 이용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증가량이 1%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핵융합반응의 주목적이 핵분열 반응 증강이라는 점에서 수소폭탄과 같은 핵융합무기와 구별된다." 이상민, "북한의 증폭핵무기 개발 가능성 고찰" 동북아안보정책분석(NASA), 2014.8.12

32)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혼합가스를 핵분열 물질(pit) 안에 넣어줌으로써 핵폭발 시 중성자의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생성된 중성자가 핵분열의 효율을 대폭 향상시켜 일반적으로 2~5배의 위력 증가를 가능케 한다 함.

33)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는 전세계에 분포된 321개의 관측소와 16개의 방사능 핵종 연구소로 구성된 국제감시체계(IMS)를 운영하며, IMS의 건설과 운영비용은 CTBTO가 부담한다. 여기에는 지진파 탐지, 수중음파탐지, 공중음파 탐지, 방사능 핵종 탐지 체계가 있다.

심할 만한 물질이 포집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 중국 과학기술대학 연구팀,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등이 2010년 5월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 북한노동신문은 2010년 5월 12일 1면 기사에서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며, “핵융합의 성공은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 과학기술 면모를 과시한 일대 사변”이라고 주장
- 중국 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2014년 11월 지구물리학 국제학술지 「지진학 연구소식」에 게재된 논문에서
 - “북한이 2010년 5월 12일 소규모 핵실험을 한 사실을 「미진검측방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폭발량은 약 2.9t(오차율 0.8t)이고 폭발 중심은 북위 41.2863도, 동경 129.0790도(오차 350m)”라고 주장
- 2012년 4월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에릭 라스 데 예르」는 세계적 권위의 군사과학저널「과학과 세계안보」에 게재된 논문에서
 - ‘한국, 일본, 러시아의 핵물질 감시 관측소와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CTBTO)의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한반도 상공의 대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
- 마이클 쇼프너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과 올리히 쿤 독일 함부르크 대학 연구원은 최근(2015년 2월)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 게재한 글에서
 - “올 1월 발행된 지진파 분석결과는 2010년 5월 핵실험이 있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5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방사능 핵종과 비활성 기체를 탐지하는 복수의 관측소가 핵실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핵종을 포집했다.”
 - “특히 이 같은 핵종의 일부는 국제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한 번도 탐지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며 “그 원천이 무엇인지가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 “핵종 및 비활성 기체 감시 시스템이 파장형태의 탐지방식으로 놓친 것을 탐지해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하기 위한 원재료를 자체적으로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의 확보³⁴⁾가 관건이다. 북한은 삼중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5MWe 흑연감속로³⁵⁾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8,000여개의 핵연료봉 중 우라늄 연

34) “삼중수소는 중수소와 같은 원자로에서 생산된다. 우리나라도 월성에서 중수소를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부산물로서 막대한 양의 삼중수소를 생산·저장하고 있다. 이 경우 삼중수소 생성 메커니즘은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소가 중성자를 1개 받아들여서 삼중수소가 되는 것이다. 이 방식 이외에도 리튬6라는 물질에 중성자가 조사될 경우 삼중수소가 생성된다. 1950년대 영국이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 생산을 위해 윈드스케일(Windscale) 흑연감속로를 일부 개조하여 가동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로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삼중수소 생산을 위한 개조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14년 9월 포럼동서남북개최 세미나에서의 박희락 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이상민의 토론문에서 재인용.

35) 1986년 1월 가동을 개시한 5MWe 흑연감속로는 핵연료봉을 812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노심(core)에 채널당 10개씩 장전. 총 8,000개가 넘는 핵연료봉이 동시에 장전되기 때문에 1회 장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의 양은 약 50톤. 이를 통해 Pu의 양은 연간 약 6kg.

료봉 대신에 일부를 리튬⁶³⁶⁾으로 대체함으로써 삼중수소를 생산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는 리튬 광산이 다수 존재하므로 리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13년 8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5MWe 흑연감속로의 목적은 플루토늄 추출 뿐 아니라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삼중수소를 다량으로 확보하여 제4차 핵실험 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³⁷⁾

다음으로 제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는가를 살펴보겠다. 북한은 금년 2월 1일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에서 ‘수소탄’ 핵실험의 폭발력이 작았다는 점을 이유로 ‘실패’로 규정한 한미 측의 평가에 대해 ‘수소폭탄 실험이었음을 강변’하면서 “핵폭발 능력을 임의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이날(1월 6일) 오후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한국시간 10시30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자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대한 각종 핵 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라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6년 1월 6일 연합뉴스)

정일철 ‘남조선문제연구사’는 2월 1일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 기자와 나눈 대담에서 “수소탄이 폭발하면 몇십 Mt(TNT 화약 백만 t에 해당)의 폭발력이 발생하는데 조선에서 시험한 수소탄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몇 kt의 폭발력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실패의 근거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우리 령토(영토)가 미국이나 기타 나라들처럼 땅덩어리가 넓다면 얼마든지 지금껏 핵 대국들이 실시해온 수소탄 시험보다 몇 십, 몇 백 배나 위력한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당장 견어치우고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인 조선과 공존,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2월 1일 연합뉴스)

36)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www.nktech.net)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지질학적 구조상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의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광, 텅스텐광은 물론이고 리튬이나 탄탈륨과 같은 희소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북한이 5MWe 흑연감속로를 선택한 것은 풍부한 천연 우라늄과 양질의 흑연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튬까지도 자체 생산이 된다고 한다. 수소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삼중수소 생산에 도전해 볼 만하다. 리튬은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 리튬6(7.5%)과 리튬7(92.5%)의 상태로 존재한다. 리튬이온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리튬은 대부분 리튬6을 뺀 리튬7로만 구성된다. 왜냐하면 리튬6은 리튬을 추출할 때부터 이미 핵융합용으로 별도로 분리해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리 추출된 리튬6에 중성자를 쏘아주면 삼중수소와 헬륨이 생성된다. 리튬6을 분리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므로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수은을 다룰 수 있는 실험실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추출할 수 있다. 북한이 삼중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리튬6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임에 틀림없다.” 이 상민, “북한의 증폭핵무기 개발 가능성 고찰” 동북아안보정책분석(NASA), 2014.8.12

37) 수소폭탄의 설계방식은 이미 공개되어 있어 3중수소의 확보를 통해 어렵지 않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반면 한국 정부는 제4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제3차 핵실험에도 못 미치므로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낮다.’면서,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보수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6년 1월 7일 미국 정부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결과를 초기 분석한 결과, 수소탄 요소가 포함된 소형 폭발로 결론을 지었다.”고 보도했다.³⁸⁾

국정원은 이번 4차 핵실험의 위력과 지진파가 지난 3차 핵실험 때만큼도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국회정보위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원소 포집을 통해 리튬이 발견되면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이 입증되지만, 만약 제논, 크립톤, 요오드 등의 성분만 발견되면 수소폭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새롭게 개발한 실험용 수소탄’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 지금까지 개발된 통상적인 수소폭탄이 아닐 가능성에도 주목하면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주호영 위원장은 전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소폭탄은 미국과 옛 소련 정도만 실시했는데 20~50 메가톤이었다.”며 “(이번 핵실험 위력) 6kt는 상당히 적은 수치로, 그 정도로 북한이 수소폭탄을 했다고 하기는 무리”라며 “이번 핵실험은 수소폭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6년 1월 6일 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폭탄 주장과 한미 측의 ‘증폭핵분열탄’ 주장이 대립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4차 핵실험이 제3차 핵실험과는 다른 3중수소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력을 과시한 폭탄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공기 중에서 삼중수소나 리튬이온을 포집하지도 못했으면 서도 이번 핵실험을 왜 통상적인 핵폭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이라고 추정하는 것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①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수소폭탄을 개발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점³⁹⁾, ② 북한이 5MWe원자로를 통해 삼중수소를 얼마든지 포집할 수 있다는 점, ③ 북한에 리튬 광산이 있어 리튬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점, ④ 북한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라고 12월 15일 지시했고, 1월초 당 군수공업부장이 수소폭탄 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문을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필자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상기 북한 정일철 남조선문제연구소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50MT급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토가 협소하여

38) 연합뉴스, 2016년 1월 7일.

39) 미국은 1차 핵실험 후 7년 중국은 1차 핵실험 후 3년 만에 수소폭탄 개발

대규모 수소폭탄을 실험할 장소가 없어 소형 ‘중폭핵분열탄’으로 실험을 대신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현 시점에서 수소폭탄을 제조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수소폭탄은 일반 핵폭탄 보다는 부피가 대단히 커서 아직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직접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3)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수준과 핵탄두 폭발 실험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폭탄의 직경이 대략 90cm이하이고 탑재중량이 1t 이하로 소형화·경량화 되어야 한다.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후 북한은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공표했다.⁴⁰⁾

미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에서도 “북한은 현재 탄도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는 자신있게(with moderate confidence)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2013년 4월 11일 램본(Doug Lamborn) 상원의원이 발표했다.

2014년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한미 정보당국이 2016년 5월초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016년 3월 9일 김정은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⁴¹⁾ 이 때 김정은은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을 앞에 두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한 장면이 노동신문에 보도되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상기 북한이 공개한 핵기폭장치 모형(KN-08용)을 바탕으로 3월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지름 60cm, 200~300kg 정도로 소형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스커드B,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 KN-08미사일 등 광명성로켓⁴²⁾을 제외한 모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보유



40) 대개 기존의 핵개발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면 소형화 경량화에 2년에서 7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이후 8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41) 연합뉴스, 2016년 3월 9일.

42) 광명성 4호는 200kg의 탄두중량, 광명성 3호는 100kg의 탄두 중량으로 평가된다.

한 것으로 추정한다.⁴³⁾

특히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핵탄두 실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김정은이 3월 9일 공개한 핵탄두 모형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핵탄두 폭발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보유량

(1) 미사일 능력

- ①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1976년 이집트가 북한에 넘겨준 소련제 Scud-B를 도입, 역설계하여 1984년에는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 작전 배치했다. 1993년 5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1997년 9월 16일 작전배치가 확인되었다.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700kg으로 고성능 폭약과 화학탄,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 다만 1천km 비행 시 원형공산오차(CEP)가 2km 이상이어서 명중률은 높지 않다. 노동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7~8로, 고각 발사가 아닌 경우 최고 고도 400~500km로 비행한다.⁴⁴⁾ 금년 8월 3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 1발이 1,0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250km가량 침범하였다. 이 노동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인 AN/TPY-2 기지가 있는 일본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km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날아갔다. 한편 9월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3발 모두 1,000km를 날아 일본의 JADIZ를 400km 침범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9월 5일 발사한 3발의 노동미사일은 반경 1km 이내 낙하였다. 이는 노동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가 최소 2km, 최대 3~4km라는 분석치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서 동체에 유도장치를 부착해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3발에 불과했지만, 일제사격(TOT) 방식⁴⁵⁾을 적용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3월 10일 SCUD-ER을 2발 발사하여 500km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

43) “탄두 중량은 미국 110kg, 러시아 255kg, 영국 350kg, 중국 600kg 수준인데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중량을 300kg까지 추정하기도 한다.” 뉴스1박상휘 기재입력 2016.09.15. 07:00

44)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마하 8의 속도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5) TOT는 정해놓은 구역으로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사격방식이다. 북한은 2010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탄을 TOT 방식으로 발사하고 있다. 목표지역의 함정이나 시설물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정원 보고)시켰다. 500km떨어진 목표물에 명중시켰다는 것은 “기존 관성항법 장치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광학장치가 추가 탑재되어 유도조종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⁴⁶⁾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300mm방사포에 GPS유도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300mm방사포보다 훨씬 큰 SCUD-ER에 GPS유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는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연수(예비역 소장)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5월 19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국가전략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기술 커넥션을 근거로 “파키스탄은 북한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가우리(Gauri)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탄두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노동미사일 기술 지원 대가로 파키스탄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탈북 망명자들도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탄두의 직경과 중량, 구조 등을 일부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노동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보다 RCS(레이더 반사면적)가 적어 요격될 확률이 떨어지며, 주일미군 기지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사정권에 두어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서 가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예비역 소장은 “북한은 노동미사일 사거리를 단축하는 시험과 훈련 발사를 반복하고 있고, 엔진 연소 차단방식을 적용해 사거리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2014년 3월 평남 숙천에서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650km를 날아갔으며 체공시간은 7분 30초(450초)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스커드-C(사거리 500km 이하) 미사일의 개량형인 스커드-ER 미사일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2014년 7월 동해로 시험 발사한 스커드-ER 미사일은 사거리가 700km 이상으로 늘어났고, 기존 관성항법 장치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광학장치가 추가 탑재되어 유도조종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스커드-B/C 미사일의 오차반경(CEP)은 50~900m에 달하지만, 스커드-ER은 50~190m로 줄었고 북한 후방지역에서도 남한 전역과 일본의 일부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예비역 소장은 “북한은 야간·취약 시간대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 준비 절차를 간소화했고 장기간 실은 보관이 가능한 추진체를 사용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면서 “걸프전을 참고해 탄도미사일의 일제(동시다발)사격을 위한 지휘통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고도 50km에서 탄두 내 자탄을 분리하는 ERS(Early Release Submunitions)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 예비역 소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같은 무기체계는 북한 핵과 탄도탄 위협 대비를 위해 조기에 배치해야 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전력화까지는 대안이 없는 상황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핵·미사일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국방부의 북한 핵·탄도탄 대응부서를 국(局) 또는 실(室) 정도의 조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 연합뉴스, 2106년 5월 19일)

- ②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북한은 구 소련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R-27을 역설계하여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했다. 사거리를 3,000-4,000km로 확대하여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이란에 12발 수출⁴⁷⁾하여 이란이 시험 발사하였

46) 이연수, 2016년 5월 19일, 한국국방안보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국가전략세미나’ 발표문. 2016년 5월 19일 연합뉴스에서 인용.

다. 2007년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고 실전 배치하였다. 금년 들어 총 6회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 했는데 5번은 실패한 이후 6월 22일 6번째 발사에서 성공하였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10호로 부른다. 무수단 미사일(이란과 파키스탄이 시험발사)⁴⁸⁾은 지난 4월 15일에 1발, 4월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 1발씩 총 3발을 발사했으나, 3발 모두 실패했다. 6월 22일 6번째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400km를 비행했는데 해발 고도 1,400여km까지 올라가는 고각발사 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정상적인 발사고도를 유지했다면 3,500km 떨어진 괌의 앤더슨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⁴⁹⁾

③ 북한의 SLBM(KN-11, 북극성) 능력을 살펴보자! 북한은 2014년부터 SLBM발사에 주력해 왔다. 지상 사출시험에 이어 바지선에서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하여 콜드 론치 능력을 배양했다. 2014년 5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100m를 비행하였으나, 금년 4월 23일 발사 시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였고, 30km를 비행한 후 3-4조각으로 공중 폭발했다. 신포급 잠수함이 2,000톤 급에 불과하여 수심 10-15m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⁵⁰⁾ 금년들어 3차례 SLBM을 시험 발사(4.23, 7.9, 8.24)하여 8월 24일 발사에서는 500km를 비행했다. 이 잠대지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비행시험에 성공한 SLBM도 연료를 정상적으로 채우면 2천~2천500km를 비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포급(2천t급) 잠수함으로는 2천km 이상을 비행하도록 SLBM에 연료를 가득 채우기는 어렵다.

④ ICBM 개발 능력을 보면, 북한은 1990년대부터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8월 대포동 1호(사거리 2500km), 2006년 7월(실패), 2009년 4월, 2012년 4월(실패)과 12월에 대포동 2호(광명성3호)를 각각 시험 발사했다.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로켓을 발사하여 해발 고도 500km 상공에 소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되는 물체를 지구궤도에 안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포동 1호는 1단 로켓은 노동1호 미사일 엔진이 사용되었고, 2단에는 스커드 C 미사일 엔진이 사용되었다. 대포동 2호는 사거리가 6,700km이고, 개량형은 사거리가 10,000km에 이른다. 북한은 총 6회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최대 사거리 13,000km의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47) 이스라엘 모사드는 18발로 평가.

48) 이란은 북한의 BM-25를 도입하여 사거리 30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파키스탄은 4월 15일 사거리 1천300km의 가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가우리미사일은 파키스탄이 1998년 처음 시험 발사했는데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복제한 것이다. 또 파키스탄은 2015년 3월에는 사거리 2천750km로 인도 전역을 공격범위로 삼을 수 있는 샤한-3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것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기술을 기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9)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스커드 770~1천kg, 노동 700kg, 무수단 650kg 등이다.

50)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은 50m에서 사출함으로써 대잠 초계기의 탐지를 회피.

된 것으로 평가된다.

- ⑤ 대륙간 탄도탄인 KN-08은 화성 13호로 불린다. 2012년 4월 김일성 100세 생일 기념행사 때 최초로 공개된 미사일로서 길이는 20m, 사거리는 12,000km이다. 그런데 KN-08은 탄두 부위에 대기권 재진입시 내열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은 탄두 부위를 뭉툭하게 하고, 길이를 17-18m로 축소한 KN-14를 새로 선보였다. KN-14는 사거리가 9,000-10,000km로서 미국의 서해안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한미측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시 발생하는 6,000~7,000도의 고열로부터 탄두를 보호할 기술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김정일이 2016년 3월 9일 직접 내열 시험을 현지 지도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미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연구원의 KN-08 평가

존 실링 연구원은 4월 7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이 3단 추진체로 구성되었다. KN-08 추진체 1단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에 쓰인 엔진 4개로 구성돼 있고, 2단 추진체의 동력은 구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27에 쓰인 엔진 1개가 맡는다. 또 3단 추진체의 엔진으로는 R-27 미사일의 궤도수정용 보조엔진 2대가 쓰였을 수 있다.”

실링 연구원이 추정한 KN-08 미사일의 전체 길이는 약 17m, 가장 아랫부분의 지름은 1.9m였다. KN-08의 사거리는 짧게는 6천km, 길게는 1만2천km까지로 추정된다.

북한이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는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초기 작전수행능력을 갖춘 20~30발의 KN-08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최대 사거리를 1만5천km까지 늘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개량형 KN-08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4월 8일 연합뉴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사용한 내열 시험의 열이 1,000-1,500도 밖에 되지 않아 내열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노동미사일 엔진을 고정시켜 배기열로 내열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는 6,000-7,000도의 열을 낼 수 없으므로 아직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리는 있다.

그러나 내열제로 사용되는 케블라 섬유 등이 민수용으로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하므로 북한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KN-08이나 KN-14는 지상엔진 연소 시험만을 하고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실전배치를 함으로써 그 신뢰도가 의심된다.

(2) 미사일 보유량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은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 600기, 노동 미사일 200기를 포함하여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⁵¹⁾

그러나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은 2015년 2월 24일 공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에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300-500km) 800발, 노동미사일(1,300km) 300발, 무수단미사일(3,000km 이상) 50발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2016년 7월 26일 중앙일보는 익명을 원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약 5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0기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연간 미사일 생산 능력은 50-200기이며, 평남 개천 118호 공장에서 미사일을 최종 조립하고 있지만 전국 100여 곳에서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최종 조립공장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 전역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어느 한 곳이 공격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 측이 킬체인과 사드 체계 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수렴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3) 이동식 발사대 보유량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들을 탑재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을 100여대⁵²⁾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TEL을 스커드 미사일 40여대, 노동 미사일 40여대, 무수단 미사일 14대, KN-08 6대 이상 등 100여대로 분석하고 있다.⁵³⁾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2013년 5월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현황’ 보고서를 통해 KN-02와 스커드 미사일 100대 이하, 노동 미사일 50대 이하, 무수단 미사일 50대 이하 등으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추산한 100대보다 2배 가까운 규모이다.⁵⁴⁾

(4) 300m 방사포(KN-09)

북한이 개발한 300mm방사포가 미국이 한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드의 배치지역을 300mm 방사포의 사거리 밖으로 선정하게 하지 않았나 추정하게 만든다.

51) 2010년과 2008년 국방백서에는 스커드 600발, 노동 미사일 200발 등 800여기로 발표. 2014년 국방백서에는 추정치 없음.

52)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239.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2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3), p. 15.

53) 연합뉴스, 2015년 4월 16일.

54) 연합뉴스, 2015년 4월 16일.

KN-09는 로켓과 미사일의 중간 형태로 한미 정보당국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무기로 2013년부터 존재를 파악했다. 처음에는 신형 순항미사일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기에선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180km 정도로 보여 KN-01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KN-09는 300mm 신형 방사포로 판명됐다.

KN-09의 사거리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240mm 방사포의 사거리(70km)보다 훨씬 길고, 우리 군의 ‘현무-1’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KN-09는 북한의 기존 방사포와 달리 GPS 유도장치가 달려 정확도가 향상됐고 사거리도 처음 식별됐을 때와는 달리 200-230km로 추정된다. 서울은 물론 평택 주한미군 기지, 충청도도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KN-09는 방사포이기 때문에 위력은 탄도미사일보다 떨어지지만 생산비가 매우 낮아 대량으로 배치되면 우리 군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N-09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사거리는 200-230km, 고도는 30km 이하, 속도는 마하 5.5-6으로 평가된다. 2015년 10월 10일 공개된 실물은 발사관이 8개이다. 중국 방사포 WS-1B(구경 302mm, 사거리 80-180km, 4-6개 발사관, 고폭탄 150kg, 25,000개 파편, 살상반경 70m)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3월 3일 발사한 방사포는 GPS유도형으로 탄두 끝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사관이 원통형이 아니라 박스형으로 개조되었다. 3월 21일에는 5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최종적으로 발사실험을 했는데 바늘귀를 꿰듯 정확히 명중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4월 1일 북한이 300m 방사포를 3발 발사 시에는 1발만 성공하는 등 아직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IV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실태

1. 북핵에 대한 역대 정부의 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문제 시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 일이다. 1994년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해 외과 수술(SURGICAL STRIKE)적 공격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지금도 자서전을 통해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실정으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느라 수년 간 고통을 겪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북핵 관련 판단 착오가 이제 온 국민이 핵폭탄을 머리위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⁵⁵⁾

55) 당시 미국의 F-117전폭기는 북한의 레이더 성능으로는 포착하기 못할 뿐더러 핵시설이 영변에만 존재하고 있어 영변 공격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 좌파 정부는 ‘회담을 통해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대화’를 진행했다. 1994년 10월(김영삼 정부 당시)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된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지원과 실폐에 1,000MWe 원자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하였다. 이 같은 남북 간,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 핵문제를 둘러싼 로맨스는 2002년(김대중 정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2차 핵위기에 이어 2006년 10월(노무현 정부) 제1차 핵실험으로 파경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은 2007년 2.13합의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를 ‘회담과 지원을 통해 저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6자회담은 2008년까지 지속되었으나 북한이 더 이상 참여를 거부하면서 종료되었다.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회담과 지원을 통한 북한 핵무기 개발 동결’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2012년 미국과 북한 간에 2.29합의가 있었다. 미국이 영양과자 수십만 톤을 지원하는 댓가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합의였다. 북한이 ‘과자하고 핵무기를 바꿀 것이라는 환상’은 두 달이 가지 못했다. 이 환상은 2012년 4월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기 좋게 깨어졌다. 이 때 이후부터 한국이나 미국에서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환상’은 사라졌다.

2013년 2월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핵실험인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제재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추진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못이겨 핵무기 보유를 포기 하던가 아니면 체제 붕괴에 직면하든가를 선택하라는 압박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하늘이 무너져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명시적으로 ‘체제 전환’(regime chan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통한 핵문제’ 해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북한 김정은은 막가파식으로 제4차 핵실험과 제5차 핵실험을 한해 두 번이나 실시하면서 수소폭탄 제조 능력과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제작 능력을 과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3일 사드 배치 장소로 성주가 선정되었다는 발표 직후 개최된 NSC회의에서 현 안보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광저우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시 “내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었다.

2. 북핵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 ① 1988년 한국에서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을 때부터 북한은 핵 기폭장치 실험을 하고 있었다. 당시부터 안보 실무진들은 북한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등장한 정치 지도자들이 ‘불편한 진실(북한의 핵 불포기 의지)’을 『자기 집권기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키워왔다.
- ②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애써 평가절하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경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논리를 국민들에게만 내세운 것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 논리에 도취되어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다가와도 군사적 대응체제 마련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태만하였다.
- ③ 한국이 ‘북 핵문제의 제1당사자’라는 명백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의 논리에 끌려 다녔다. ‘북한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를 간과하고 ‘6자회담’, ‘미북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논리에 휘둘려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시기를 놓쳤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핵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북한의 핵무장 전 선제공격’ 등으로 위협하여 미국과 중국을 압박했어야 하나,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키웠다.
- ④ 김영삼 정부 이래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핵문제에 접근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라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논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은 또 다른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났다.⁵⁶⁾
- 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중국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미중 간에 중립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미국의 MD체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경시했다. 이로서 포괄적 동맹관계인 한미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한중관계를 동일한 비중으로 바라보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다. 북한군의 남침 시 공동 대응할 전우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중국을 같은 비중으로 다룸으로써

56)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 1달 전에 사망하여 무산되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실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핵문제 해결은 커녕 북한 체제를 강화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자금을 마련할 길만 터주고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비밀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핵문제 해결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한국은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계속 준비·연구하고 있다.

- ⑥ 대한민국 전체가 총체적인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뿐 아니라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이르기 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온 국민이 일심단결하여 총력안보 체제를 구축하여도 북핵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좌우로 나뉘어져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분열상은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등 인접국들이 한국을 경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3.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의 문제점

(1) 우리 군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고, 2014년 전략로켓군을 전략군으로 재편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위해 군사 편제를 개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 우리 군도 이에 따라 군 구조를 북핵 대비 구조로 재편했어야 한다. 그리고 방위력 증강 목표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적 타격능력 강화와 탄도탄 요격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제1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 이후에도 재래식 무장력 강화에 돈을 계속 쏟아 부으면서 정작 북핵 미사일 대응방안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제4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폭발력이 6KT에 불과하므로 수소폭탄이 아니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제4차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에는 동의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획기적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을 후회하도록 응징하겠다.’는 말폭탄을 쏟아낸 것이 전부이다. 우리 군에서 제4차 핵실험 직후 달라진 대응내용은 ‘사드 배치 검토’였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여 핵무기 담당부서를 신설했어야 하는데 국방부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대응과”가 유일하고, 합참에는 명시적으로 담당부서가 없다고 한다.

(2)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우리 억제전략의 문제점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preemption), 방어(defense), 방호(protection), 응징(retaliation)의 4가지가 있다.⁵⁷⁾ 선제란 핵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하여 위

협원을 제거하는 것이고, 방어는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방호란 핵대피소를 운영하는 것, 응징이란 공격국에 징벌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① 우리는 ‘선제공격’을 위해 킬체인(Kill Chain) 계획을 수립

킬체인(Kill Chain)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군은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감시 정찰능력도, 타격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향후 이를 갖추어 나갈 계획만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200여기에 이르고, 지금까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그것을 사전에 파악한 것이 전무하다. 그렇다면 과연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을 경우 사전에 파악하고 킬체인(Kill Chain)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킬체인(Kill Chain)의 기본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⁵⁷⁾

- 한국군은 감시 정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북한 전역에 있는 핵미사일 관련 고정 및 이동시설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현 지대지 미사일의 정확도, 사거리, 파괴력을 향상시킬 계획
 -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중거리 공대지 유도탄, 합동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확보하여 전투기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잠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해상기반 타격능력도 증강할 계획
-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8조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천억원 증액.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kg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천억 원을 반영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천억원 늘렸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가 킬체인과 KAMD 체계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천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5년 4월 20일 연합뉴스)

57) 김태우, 2015, “한국의 북핵 억제전략: 응징, 방어 그리고 선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미나), 106쪽.

58)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58.

②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한국은 2008년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ies)-2 요격미사일 2개 대대를 구입하였다. 해상 함정에는 SM-2 요격미사일(고도 30km 이하)을 신형 구축함에 장착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조되자 한국은 2012년 이스라엘로부터 그린파인 레이더를 2식을 구입하고, 2020년까지 PAC-2를 PAC-3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하였다.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위한 THAAD 1개 포대는 내년 말까지 미군이 성주지역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해군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최대 요격고도 500KM, 최대사거리 1,500KM)의 장착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KAMD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다.⁵⁹⁾

-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 조기 경보체계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한다.
 -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우리 군은 요격체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탄도탄에 대한 방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요격거리가 향상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2020년대 중반⁶⁰⁾에 배치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구축될 KAMD 체계⁶¹⁾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40km 미만 고도),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40-60km 고도) 등으로 구성된다.⁶²⁾ 그런데 2023년 이전에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군이 어찌려고 하는지 대답이 궁급하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층방어(100km이상 고도), 중층방어(40-100km 고도), 하층방어(40km이하 고도)로 다층방어 망을 구축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59)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 58-59.

60) 2014년 국방백서에는 KAMD구축 시간을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으나 2015년 4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는 2020년대 초반으로 설명.

61) 연합뉴스, 2016년 4월 24일.

62) 연합뉴스, 2015년 4월 16일.

- 한국과 유사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하층방어(사거리 4-70km)는 아이언돔이 맡는다. 일반 포탄과 로켓포탄, 그리고 미사일을 요격한다. 2014년 여름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4,000여발의 로켓과 박격포탄의 90%를 요격했다.
 - 중층방어는 David's Sling(다윗의 물매, 40-300km 사거리)가 담당한다. 미국과 공동 개발한 미사일로 중거리미사일, 순항미사일, 로켓포탄을 요격한다.
 - 상층방어는 Arrow-3(요격고도 100km이상)가 담당한다. 이 고고도 미사일은 미국 보잉사와 이스라엘의 IAI가 공동 생산했다. 이 미사일은 2,000km 사거리인 이란의 샤하브-3를 요격한다. 2015년 12월 10일 시험발사하여 탱크포탄 보다 2배 속도로 날아가 대기권 밖 목표에 명중했다.

그런데 우리의 KAMD는 상층방어용 미사일이 빠져있다. 대기권 밖에서 요격해야 명중률이 높고 대응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상층방어용 미사일 도입계획이 없는 것이 결정적 흠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무기인 사드 2개 포대를 우리 돈으로 구입하고, 해군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 탑재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향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절인 1970년대 한국은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했었다. 미국이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후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고,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 되었다. 미국은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6만2천명에 이르던 주한미군을 1971년 보병 7사단을 철수함으로써 4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1976년 등장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라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일성은 이 시기를 한반도 공산화의 호기로 판단하고 소련과 중국의 남침 인가를 받으려 노력했다. 이때가 대한민국에는 총체적 안보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구호가 ‘총력안보’였다.

40년 세월이 흘러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할 만한 수준에 왔으나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지 못해 대한민국은 또 다시 총체적 안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권은 1970년대와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었다. 국가안보 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안보는 정부나 군대가 할 분야이지 내 일이 아니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어떻게 해 주겠지! 한국을 지키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니 대한민국이 중국에 양다리를 걸쳐 미국을 좀 섭섭하게 해도 對韓 방위공약을 굳건히 이행하겠지!”라는 소아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좌우로 분열되어 극심한 대립 속에 상대방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흠집 내기에

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공직사회에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와 우리 군은 ‘비핵국가’인 대한민국이 ‘절대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至難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핵을 보유한 나라의 공격을 비핵무기로 온전히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난국을 돌파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의 지휘 하에 모든 행정조직과 군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북핵 무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실행해야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0년대에 한국이 총체적 안보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40년이 지나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또 다시 총체적 안보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가 내세운 ‘총력안보’가 시스템적으로는 현재 보다 완전하지 못했겠지만 국민들과 정치권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한마음 한뜻 이었다. 21세기에 1970년대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 평화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온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또 다시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총력안보체제’가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방안이 융·복합적 대응이 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지휘 하에 정부와 군, 그리고 민간부분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융합적 대응을 하면서, 민간부문 등 각 요소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최고 지휘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융합적 대응 시스템에서 발생한 빈틈을 최고 지휘부에 피드백하여 융합적 대응체제를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1. 우리의 국가적 대응

(1) ‘총력안보체제’의 구축

- 현재 안보상황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함.
 - 국민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 상황을 직시하도록 계도하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유도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영국 수상은 독일과의 전쟁

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듯이, 우리 정부도 국민들에게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현 1차장을 ‘북핵 전략’ 차장으로 명칭 및 역할을 변경하고,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핵 대비 전략을 총괄 지휘해야 함.
 -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하여 정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과 일정표를 작성, 시행
 - 북핵 억제에 실패하여 실제 핵무기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폭발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군,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의 행동방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매뉴얼을 작성

(2) 북핵 대비 정부조직 개편 및 핵 민방공 훈련·교육 실시

- 북핵 대비를 위해 관련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북핵 대비 부서를 신설
- 민방위 훈련에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
 -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공격 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존율을 증대
- 현재 사용 중인 민방위 대피소를 핵 방공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거나 필요한 지역에는 핵 방공호를 신설
- 지하철과 각종 터널 및 지하 시설물들을 핵 방공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피훈련을 실시
- 각 가정에 방독면과 방사성 낙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복을 비치토록 유도

(3) 군 조직의 개편과 전력증강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 국방부에 ‘북핵대응국’을 신설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핵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공격작전을 총괄할 ‘핵전략사령부’와 방어작전을 총괄할 ‘핵방어사령부’를 신설
 - 북핵 시설과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과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소요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개발
- 현재 북한과 주변국의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증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핵대응 분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전환토록 하고, 북핵 대비를 위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 군복무여건 개선, K-2전차 추가도입, KF-X사업(2017년 3030억원), 이지스함 추가 도입계획 등 북핵 대비를 위한 전력 보강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필요

(4) ‘북한 체제전환’(regime change)에 총력 경주

- 북한에 자유세계의 정보가 대량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전환을 추진
 - 대북 확산기의 추가 배치와 함께 2004년까지 운용하던 대북 전광판의 재 가설
 - 현재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전단살포 사업을 군이 첨단 기자재를 활용하여 직접 살포
- 특히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2016 ‘북한 정보유입 촉진법안’(H.R. 4501)”을 의결했는데,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수단을 기존의 라디오 한 종류에서 여러 기기들을 포함하도록 다양화하였음.
 - 미국 의회에서 동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한국 드라마, 가요, 영화 등을 유입시키는 정보유입을 촉진
-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을 활용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전쟁지휘부의 동선파악과 지휘부 암살, 쿠데타 등 체제 전복을 위한 휴민트를 극대화
 - 이를 위한 정보 예산의 증액과 공작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1)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와 한·미의 전술핵무기 공동 사용

■ 장 점

- 남북한 간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
-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따른 부담 경감
 - * 미국은 2015년 현재 약 180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보관 중이며, 미국은 과거 냉전 기간 중 NATO 일부 국가와 핵무기 공동사용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단 점

-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흔쾌히 동의해 줄 가능성이 낮음.⁶³⁾

〈9월 14일 KBS9시뉴스〉

미국의 성김 특별대표는 어제(13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수석대표 회동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김 대표는 이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홍균 본부장도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북한 핵폐기 명분과 유엔의 대북제재 명분이 일부 퇴색할 가능성이 있음.
- ※ 재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북한의 핵폐기 시 철수할 것임을 명백히 공표한다면 북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적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전술핵무기의 한미 간 공동사용 요구'를 미측이 승낙할 경우 북핵을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2)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⁶⁴⁾

■ 장 점

- 한국은 핵보유국으로서 향후 미국의 핵우산 없이도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 핵무장에 대한 국민 지지율 : 전체 54% / 여당지지층 62%, 야당지지층 47%

■ 단 점

- 북한의 핵보유를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효화 시키고, 남북한이 상시 핵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조성
- 미국의 불허 또는 나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추락
- 핵무기 개발 추진으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 손상. 특히 박근혜

63)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III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금년 들어 3회 발사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경고한 바 있음.

64) 연합뉴스, 2016년 5월 19일.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핵 고도화와 한국의 핵 선택'이란 발표문에서 "북한은 앞으로 10년 후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비축하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북핵 제재 성과와 추가 도발에 따라 핵무장 A플랜, 핵무장 B플랜을 추진해야 하고 지금부터 이 플랜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핵무장 A플랜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 파기, 독자 핵억제력 구축이며, 핵무장 B플랜은 NPT 준수와 미국 비확산정책을 따른 가운데 비밀리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 정부의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노력의 무실화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언한 현 정부의 신인도 추락

-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포기하고,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파기 및 주한 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농후
- 향후 한국의 전력증강 사업은 미국의 대한 무기공여를 거부할 것이므로 차질을 래하고,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한국의 모든 무기체계의 부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첨단 무기들이 고철덩어리로 화할 가능성 농후
-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 증가
 -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실제 정책적으로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옵션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북핵 폐기를 실현하고,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을 확실히 보장받는데 유효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거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댓가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때에는 독자적 핵무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76년 취임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의회와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한미연합사령관, 국방장관 등이 모두 반대함으로써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포기하고, 1979년 11월 대통령 선거 후로 논의를 연기하였으며, 1980년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전두환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 취소케 했음.

(3)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상주

- 현재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기항하고 있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 핵추진 잠수함과 괌에 배치된 B-1B, B-52 등 전략무기들이 상시 한반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미측에 요구

3. 군사적 대응

(1) 탄도탄 3중 요격체계의 완비

- 상층 방어체계(요격고도 100km 이상)
 - 성주지역에 배치를 추진 중인 미국의 사드 1개 포대를 최단시간 내 반입(반입에 1주

일 소요)하여, 한국군 또는 미군기지 내에 우선 배치하고 성주에 부지가 조성되면 성주로 이동 배치

- 통상 6개 발사대로 운용중인 1개 사드 포대를 최대 운용가능 발사대 숫자인 9개 발사대로 운용해 줄 것을 미측에 요구. 이 경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 수는 $6 \times 8 = 48$ 에서 $9 \times 8 = 72$ 발로 증가.
- 우리 예산으로 미국으로부터 사드 2개 포대를 구입. 우리가 구매하는 사드 포대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200대에 이르므로 초탄 200발을 모두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각 포대 당 9개 발사대로 운용⁶⁵⁾
 - ※ 미국으로부터 사드 도입이 여의치 않거나 현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사드 도입을 먼저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社에 구매를 요구하더라도 생산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드와 성능이 거의 같은 이스라엘의 ARROW-III(보잉사 합작품)의 구매도 고려
- 현재 우리 해군이 운용중인 이지스함 3척에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 SM-2를 요격고도 500km의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SM-3로 교체 추진.(현재 미국 측과 협의 중)
- 중층 방어체계(요격고도 40-100km)
 - 국산 L-SAM미사일(요격고도 40-60km, 2023년 배치 계획)의 조기 개발 추진
- 하층 방어체계(요격고도 0-40km)
 - 현재 한국군이 보유중인 PAC-2(요격고도 15km, 파편형) 8개 포대를 PAC-3(직격, 요격고도 20km)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조기 완료
 - 미국은 구형 PAC-3 미사일 64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데, 2017년까지 최대 요격고도 40km인 신형(PAC-3 missile segment enhancement)으로 교체를 추진 중⁶⁶⁾
 - 지난 봄 한국군의 M-SAM 미사일(요격고도 20-25km, 2018년 실전배치) 시제품인 천궁(구 철매II)이 요격에 성공. 천궁의 추가 시험발사를 앞당겨 조기 실전배치 추진

(2) SLBM에 대한 대응

- 3,000톤급 잠수함의 조기 건조 및 실전배치
 - 2018년까지 3000톤급 잠수함 2척은 전력화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실전배치. SLBM

65)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00기에서 발사되는 초탄을 사전에 파괴시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한미 측의 총 사드 미사일 보유 숫자를 $72 \times 3 = 216$ 발로 산정.

66) 한국의 주요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25개 PAC-3가 필요하므로 나머지 17개 포대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미국에 구입요청을 하더라도 도입시기가 우리가 개발 중인 M-SAM 미사일의 실전 배치 시기 보다 늦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한국산 M-SAM 미사일의 실전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생산량을 증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용 수직발사대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은 2027년까지 9척 건조 계획임.

- 상기 2020년까지 실전배치 계획인 3000톤급 잠수함 가운데 설계변경이 가능한 잠수함은 (현재는 부상 후 크루즈미사일을 발사)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설계 변경 필요

- 현재 보유중인 잠수함
 - 209급(1200톤) 9척
 - 214급(1800톤) 6척, 214급 7번 함(홍범도함)은 2017년 7월 전력화하고, 총 9척 보유예정. 사거리 1000km의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3 탑재
- 2020-2024년 장보고III(3000톤급) Batch-1(1-3번 함)
 - 수직발사관 6개, 현무2B(사거리 500km이상)
- 2025-2027년 장보고III(3000톤급) Batch-2(4-6번 함)
 - 수직발사관 10개, 현무2B(사거리 500km이상)
 - 7-9번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자는 주장 제기

-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 핵추진 잠수함의 자체 건조에 10-15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국 원자력연구원)⁶⁷⁾
 - 2002년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45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바라쿠다) 도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전 정보가 유출되어 미국이 반대함으로써 무산
 - 북한의 SLBM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동향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시 수중에서 북한 잠수함을 격침할 필요
 - 금년 봄 호주가 프랑스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12척(4500톤급 바라쿠다)을 도입(44조 원 사업)하면서 원자로는 프랑스가 50년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 보유 의혹’을 불식시키고, 미국의 허가를 득한 바 있음. 우리도 호주방식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거부 명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대량응징 보복작전(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의 일부 지역(전쟁지휘부가 숨을 만한 지역)

67) 조선일보, 2016년 9월 12일. 원자력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의원에게 낸 자료에서 “2012년 소형 원자로 ‘스마트’를 개발한 적이 있어 핵잠수함의 기본 기술력은 이미 확보돼 있다”면서도 “핵심기술 개발, 실험 원자로 건설, 인허가와 최종 탑재까지는 약 10-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잠수함의 원자로는 설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전 때문에 수년간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스마트 원자로도 사전 테스트, 운영허가까지 약 10년이 걸린다. 원자력 연구원은 예산부문에 있어 “현재 상용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에 2조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도 2조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을 지도상에서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타격하는 응징작전임.⁶⁸⁾

- 이 작전은 선제 타격적 성격을 가지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복작전의 성격으로 변화
- 이 작전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km), 현무-2B(사거리 500km)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사거리 1000km) 등 총 1,000여발이 총동원됨.
 - GBU-28 벙커버스터를 사용하여 김정은이 은신한 지하대피소를 타격
 - 그리고 내년까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할 계획이며, 올해 말 독일에 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수입하여 실전배치할 예정

- 타우러스는 Kill-Chain의 핵심이 되는 공대지 미사일로서 2016-2017년간 170여 기가 실전 배치 될 예정
 - 최대사거리 500km, 비행고도 30-40m, 레이더망 회피 스텔스 기술 적용, 속도 마하 0.95, 기당 20억원, 6m 콘크리트 관통
 - 미국정부가 2016년 2월 미군의 군용 GPS 수신기를 장착을 승인하여 북한의 재밍 회피 가능
 - F-15K에 타우러스를 장착하여 연내 전력화 예정

- 이 작전에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1개 여단을 재편성하여 평양 등에 침투시켜 김정은 등 북한 핵심요인을 제거하는 작전도 포함
 - 핵심표적은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 핵시설, 미사일 기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시설 등임
 - 군 당국은 300억원을 ‘대테러 장비 보강’ 명목으로 편성해 특수부대가 사용할 소총 등 개인화기, 통신장비 등을 보강
 - 그러나 특수부대가 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저공 은밀 침투가 가능한 특수 수송기와 헬기를 도입해야 하며, 북한의 핵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해야함.⁶⁹⁾

- 군 정찰위성은 2020년-2022년 간 5기 도입 예정
 - 4기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1기는 전자광학(E.O)과 적외선 장비(IR)
 - 4기는 군, 1기는 국방부, 국정원 공동 운용

68)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9월 11일 우리 군이 공개했다.

69) 이 같은 장비 도입에 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됨. 내년도 국방예산이 40조에 달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전력 증강 사업 중 일부를 과감하게 줄여서 소요비용을 조달해야 할 것임.

4. 외교적 대응

- 북핵 폐기를 위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보다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외교적 노력 경주
 - 지난 2270호의 빈틈을 메우고, 북한의 외화수입과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자재 도입을 철저히 차단
 - 이번 결의안에는 “인도적 차원의 광물수출 허용 조항 삭제,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섬유류(임가공) 수출 금지, 북한 선박의 운항 제한조치의 확대, 석유류 수입 금지, 고려항공의 해외취항 금지, 북한 관광금지” 등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
 - 이와 함께 미국이 대북제재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Secondary Boycott을 발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발동시킴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
 - 미국, 일본과 EU 등 개별국가들의 독자적 제재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외교적 노력 집중
- 한미동맹의 강화
 -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주 타격 목표로 하지만, 주일미군 기지와 괌, 그리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북 핵무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미국 MD가입 거부 태도와 미·중 간에 중립적 입장을 취한 사실 등이 동맹국인 미국을 자극할 만한 요소였음
 - 이번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중국이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을 통해 ‘사드 배치지역 공격’ 등을 주장한 것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음
 - 중국이 사드배치를 ‘한국의 미국MD체제 가입’으로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미·일과 공동으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MD체제 가입을 회피할 이유가 사라졌음
 - 한·미 간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한 조건이 논의되거나 언젠가는 해체(2020년대 중반, Kill-Chain과 KAMD 완성 시점)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필요
 - 이를 통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 방어, 선제, 응징 작전을 지휘하도록 해야 함
-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을 조기 체결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체제 구축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협정 체결을 모색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군사정보교류약정(MOU)을 2014년 체결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재하고 있지만 한·일 간 직접적 공유가 부재해 신속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한·일 양국 협조가
 긴요

9월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9월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방위기밀 공유에 필요한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 장관이 국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열린 한·미·일 국방당국 차장급 화상회의에서도 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GSOMIA 체결을 요청하면서 미국의 대일 안보 공약 확인, 한·일 군사 협력 강화 등 외교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일본의 100대에 이르는 대잠 초계기와 일본의 군사위성(6기)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SLBM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정보 협력이
 긴요
-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핵도발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일
 간 GSOMIA 체결은 물론 한·미·일 간 군사적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
-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
 -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활용하여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 한국은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 개발 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

VI 맺는 말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고의 안보위기에 있다. 6.25남침은 재래식 전쟁이었기에 유엔군의 도움과 국군의 분투로 북한군과 중공군을 몰아내고 우리 땅을 수복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구에서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안보불감증에 감염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의 성주배치 발표 직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현 안보상황을 극명

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박대통령의 말씀은 총체적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현 안보위기 상황을 자각하고 일심단결하여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와 군은 북핵 대비를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확보, 군비증강 그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제, 방어, 방호, 응징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과 독자적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래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또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등이 있을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하거나, NPT를 탈퇴한 후 독자적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 있고,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미국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장해 봐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여 전술핵무기를 재 반입할 가능성이 낮다. 우리의 독자적 핵보유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주장할 것이 아니다. 독자적 핵보유는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에 역행해 한국을 ‘국제적 부랑아’로 만들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북한 수준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비등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반입 요구와 독자적 핵무장론은 중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핵 폐기에 실패하면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최고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확장된 억제’를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압력이 되고,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인근 지역에 추가 투입하여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술핵무기 재반입 주장과 독자적 핵무장론은 국내 안보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유엔 회원국들의 대다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행위가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유엔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5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결의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 엄격히 시행된다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는 감히 이를 수 없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유엔 회원국들의 압박으로 가능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엔의 강화된 대북제재 여건 속에서 북한체제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평화통일을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借刀殺鷄’ 전략이 된다. ‘남의 칼을 빌려 닭을 잡는다.’는 말이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운 북한 체제붕괴 전략을 유엔의 힘을 빌려 완수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붕괴하기 전에 핵무기로 도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에 대한 대량응징보복작전 능력을 갖추고, KAMD를 조기 완성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공작과 체제전복 공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체제 붕괴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이러한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한다면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보위와 남조선혁명 완수를 위해 핵으로 무장하였지만, 의도와는 반대로 무모한 핵보유 욕심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세습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의 호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1. 우리의 국방예산

- 2016년도 국방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인 3%보다 높은 4% 증액되었다.

특히 고고도 무인정찰기 확보나 팻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같은 방위력 개선비는 6% 넘게 대폭 증액됐고, 여기에 사병들 봉급 인상, 방탄복 같은 개인장구 지급 등 전력 운영을 위한 예산도 3.2% 증가하였다.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국방부는 2017년 국방예산을 2016년보다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수치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 전력 보강,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 군 복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됐다. 안전분야 예산은 범죄자 관리,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 힘썼다.

국방예산은 안보역량 확보를 위해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16년 대비 4.5% 증가한 12조 1,590억 원을 차지한다. 이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예산은 크게 우리 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현재 병력 운영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2016년 전체 국방 예산 38조 7,995억 원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 6,398억 원, 전력운영비는 27조 1,597억 원이었다. 2017년 방위력 개선비는 12조 4,780억 원, 전력운영비 28조 3,952억 원으로 각각 8,382억 원(7.2%), 1조 2,355억 원(4.5%)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선제타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조 5,936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1조 5,212억 원에 비해 724억 원(4.8%) 늘어났다.

비무장지대(DMZ), 해안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서는 1조 2,225억 원을 더 편성했다. 2016년 편성된 1조 1,254억 원보다 971억 원(8.6%)을 더 요구해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 K2 흑표전차 등 국방개혁용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올해(3조 51억 원) 대비 5860억 원(19.5%) 늘어난 3조 5,911억 원을 편성했다.

육군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수입과 K1A1전차 전력개선, 해군 광개토대양함 및 장보고 잠수함 전력개선, 공군 차세대 스텔스기 F-35와 공중급유기 수입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항목에서도 예산이 증가했다. 2016년 4조 1,214억 원에서 3,008억 원(7.3%)이 늘어난 4조 4,222억 원을 요구했다. 육군 전력증강에 3,208억 원, 해상 전력 1조 7,015억 원, 공중 전력에는 1조 9,596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 등의 개발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조 5,571억 원에서 6,227억 원(24.4%) 늘어난 3조 1,79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장병들을 위한 군 복무여건 개선작업도 진행된다. 장병 봉급을 내년에는 9.6% 올려 병장 기준 월 19만 7,000원인 봉급이 내년에는 21만 6,00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군 장병들이 숙식하는 병영생활관 전 내무반에는 580억 원을 들여 3만 709대의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다. 격오지 부대에는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에도 실내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자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 집중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의 갈등에서 '균형자' 역할을 내세워 미국과의 평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했다.

2006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2월 23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작전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어 2009년 북한의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하며 전환 연기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0년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는 없다고 단언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역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를 공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기류가 바뀌었다. 2013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가 아닌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2014년 4월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특정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해 한국으로 이양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서 정한 3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갖춰지고 북한과 동북아의 안정이 찾아오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해석된다.

이에 국방부는 "무기한 연기는 아니며 전환시기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두 사업은 한국군의 핵심전력 증강사업으로 패트리엇 PAC-3 미사일,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 M-SAM, 정찰위성, 타우러스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사거리 500~800km의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탐지·타격·요격 무기 체계로 구성된다.

3. 북한의 금년도 중·단거리 미사일도발 일지



김 정 봉 교수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 **학력**

- ▶ 서울대학교(정치학 학사)
- ▶ 연세대학교(국제정치학 석사)
- ▶ 경남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박사 수료)

○ **경력**

- ▶ 현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 ▶ 현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 ▶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2015~)
- ▶ 현 북한연구회 회장(2013~)
-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 전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 ▶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 ▶ 전 청와대 안보정보비서관
- ▶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 ▶ 전 국정원 실장

○ **저서**

- ▶ 『북한체제연구』. 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98.
- ▶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1999.

토론 1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응방향

김 태 우

건양대 교수 / 전 통일연구원장

김정봉 교수의 발표문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응방향”은 학술적 기여도가 크고 강력한 정책적 시사성을 발하는 우수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학술적으로 동 발표문은 날로 엄중해지는 북핵 문제에 대비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융·복합적 대비’ 개념의 적용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차원에서의 학술논의를 열어가는 개척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분절적(分節的), 관료적 접근에 길들여진 정부부처들에게 통합적,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적 대응방식을 강권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흥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은 2016년 6월 2일 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융합적 접근이란 안보문제에 있어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을 수호하고 국가기반체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 정책, 능력 등 가용한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융합적으로 투사함으로써 다차원, 치명적인 군사·비군사 위협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김 교수는 ‘융·복합적 대응’을 “통합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가진 융합적 대응과 큰 틀 속에서 각 요소들이 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진 복합적 대응이 합쳐진 것”으로 정의했는데, 정부와 군에 대해 무사안일주의, 부처 이기주의 등을 경계하고 각 부처가 맡은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전체적인 통합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하여 동 발표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북핵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가 기술하고 있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제5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이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인균 박사는 지진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위력이 두 배씩 증가한다는 사실과 외국 지진센터들이 관측한 지진규모 5.3을 대입하는 경우 제5차 핵실험의 위력은 국방부가 추정한 10~12kt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¹⁾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으로 판단

1) 2016년 9월 10일 TV조선 8시 저녁뉴스.

된다. 국방부는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지진 규모 4.5로 그리고 위력을 3~4kt로 발표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전술한 계산법을 적용하면 제3차 핵실험(4.9)은 12~16kt(국방부 발표 6~7kt)으로 그리고 제4차 핵실험(4.8)은 9~12kt(국방부 발표 6kt)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5차 핵실험은 국방부 추정치(5.04)를 근거로 하면 16kt이상으로 그리고 외국 기관들의 추정치(5.3)를 기준으로 하면 48~64kt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북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음을 시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김 교수가 지적한 한국 정부와 군이 노정한 문제점들 역시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과거 정부들은 “내 임기동안에는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폭탄 돌리기’를 반복했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누적된 취약성을 안고 북핵을 대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군이 지나치게 소극적·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도 공감할 수 있다.

다만, 한국군의 억제전략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상황을 좀 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본 토론자는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를 통해 ‘상호 취약성에 기반하는 응징전략’을 건의한 이래 학술발표, 방송해설, 칼럼 등을 통해 한국군이 공개적으로 추진해온 선제(킬체인)과 방어(KAMD)가 매우 필요한 억제전략의 요소이지만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킬체인과 KAMD는 계속 추진하되 억제력이 강하고 직접적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경비가 소용되는 ‘징벌적 응징’에 비중을 두는 ‘저비용·고효율’ 억제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²⁾

그러나, 제5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가 공개한 북핵 억제전략은 그 동안 한국군이 응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9월 12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주최한 국회 ‘핵포럼’에서 한민구 장관은 대량응징보복(KMPR: Korean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개념이 포함된 강화된 억제전략을 ‘한국형 3축 체제’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즉, 선제(Kill Chain)와 한국형미사일방어(KMAD)에 대량응징보복(KMPR)을 추가하여 ‘한국형 3축 체제’로 칭한 것이며, 응징보복에는 북한의 핵 도발시 지휘부를 꺾어버리는 참수작전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2) 김태우, “능동적 억제전략하 3축체제 구축,”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보고』 2010. 12. 6.; “북한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2013년 9월 26일 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핵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2013. 3. 22. 한국군사문제연구소·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해병대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능동적 억제전략과 해군의 역할,” 2010년 11월 18일 제65주년 해군창설 기념 세미나 발표문; “군사적 응징,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동아일보 2010.5.22. 시론; “북핵억제를 위한 연합대비 태세 강화,” 2015년 2월 5일 여의도연구원/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국방정책발전 세미나 발표문; “북핵대응, 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1월 30일 시론; “응징, 방어 그리고 선제 (Deterring the North Korean Bomb: Retaliation, Defense & Preemption),” 2015년 8월 2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헤리티지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9.19 공동선언 10주년」 발표문; “선제-방어-방호-응징’ 전단계 군사적 역제가 핵심,” 중앙선데이 2016.1.1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생존전략,” 2016년 8월 4일 원유철 의원실 주관 세미나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주제발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 한국해양안보포럼-충남대 2016 국내학술세미나 (2016.8.29) 발표문 등 참조.

이 계획에 의하면, 3축 체제의 제1축인 Kill Chain은 북한의 핵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이사일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핵 발사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작전체계를 선제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제2축인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이 한국 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대탄도탄 미사일로 요격·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제3축인 대량응정보복(KMPR) 체계는 북한이 핵공격시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들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향해 응정보복을 감행하게 된다.

국방부가 밝힌 3축 체제는 세 가지 이유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³⁾

첫째, 억제전략으로서의 응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 억제전략으로서의 응징의 중요성을 논함에 있어 가장 곤혹스러웠던 점은 일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응징이란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이후에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용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응징전략은 응징 그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라 강력한 응징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만류하는 억제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 일단 공격을 받은 후의 응징도 제2과, 제3과 공격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실, 미·소 냉전 동안 핵전쟁 발발을 억제한 핵심적 억제전략도 상호취약성을 담보하는 상호확실파괴(MAD) 전략이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류로서 전략논의를 불필요하게 혼란에 빠뜨릴 소지를 가진다. 한국군의 응징전략을 표방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

둘째, 정밀타격 역량의 배양과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적의 지휘부 타격이나 핵심요인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중심작전(EBO)의 개념도 충분히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이론에 있어서 최상의 선택은 실제 전쟁을 겪지 않고 이기는 것이며, 전쟁 발발 후에는 인명살상과 피해를 가급적 피하면서 핵심적인 목표들을 우선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조기에 적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식의 전쟁이 가지는 효과는 제 1, 2차 걸프전쟁에서 미군에 의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군이 재래군사력을 통한 대량응정보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지는 최대의 의미는 한국군이 선제와 방어를 수행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응징 부분을 담당하는 현 북핵 억제체계에서 한국군의 재래군사력이 응징에 가세함으로써 억제력을 크게 높이고 동맹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증대한다는 데 있다. 재래군사력은 파괴력에 있어 핵무기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응징의 신뢰성 자체는 크게 높아지는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핵 응징 약속과 합쳐짐으로써 북한의 핵사용 결정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한국군이 북핵 억제를 위해 ‘대량응정보복’ 개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억제전략의 정도(正道)를 섭렵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비방안으로서 총력안보체제의 구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태우,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한국형 3축 체제,” 2016년 9월 30일 육군사관학교 개교기념 세미나 발표문(예정) 참조.

축, 북핵 대비 정부조직 개편 및 핵 민방위 훈련·교육 실시, 군 조직의 개편과 전력증강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북한 체제전환(regime change) 시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검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상시 배치, 3중 미사일방어 체계 완비, 북한 SLBM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핵추진잠수함 확보, 안보리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한국의 우국(憂國)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한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김 교수와 전문가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융합적·총체적 북핵 대비책을 정립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지금도 한국에는 안보현실과는 정반대의 반안보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안보 위험국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장의 정치현안에 내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북핵이 남북간 비대칭을 심화시켜 한국 안보의 동맹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음에도 동맹보다는 한·중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들이 범람하며, 정치권 역시 다가오는 대선(大選)에 매몰되어 ‘사드 반대,’ ‘모병제’ 등의 한가한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라는 엄중한 도발에 비하면 사드(THAAD) 배치는 한낱 부분적인 방어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국론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사드는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현재의 핵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방비 증액, 안보국론 선도 등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대북관, 안보관, 통일관 등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는 여야(與野)로 구성된 정치권으로 이 역할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당연하며, 김 교수가 시의적절하게 제기하고 있는 ‘융·복합적, 총체적 북핵 대비’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지도 모른다.

토론 2

북핵 위협에 대한 융·복합적 대응방향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

1.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기본 인식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대부분 공감함. 특히 역대정부의 핵문제에 대한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함. 그래서 토론은 주로 발제자의 견해와 다른 점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발제내용에는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도록 하겠음.
2. 국방, 외교, 통일부에 흩어진 북한 핵문제에 관한 자료를 범 정부차원에서 집대성화하여 가칭 <북한 핵문제 총서>를 만들고 그 중에서 국민들에게 꼭 알릴 내용들을 발췌하여 <백서>로 만들어 2년마다 발간하되 ‘해외판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함. 이는 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공감대 형성, 주변국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임.
3. 2017년도 대선과정에서는 후보들의 핵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필요함. 그 일환으로 생방송 <대통령 후보 초청 북한 핵 문제 국민토론회> 개최를 제안함. 토론회에서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 위협 평가, 비핵화 방안, 군사적 대비방안, 미국의 사드배치와 미국 MD 편입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미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함으로써 핵문제에 대한 지식과 핵 대응정책 방향을 검증할 수 있음.
4. 북한 핵 대비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정부와 군은 각종 방안들 체계화하여 장기적이고 확고한 북한 핵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내외에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그래야만 혼란이 없고 정책에 대한 저항도 줄어들 것임. 이와 관련하여 3단계 전략을 제안함
 - ▲ 1단계 : 현재 상황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여 비핵화를 유도하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대응능력을 구비하는 데 집중함. 특히 KAMD를 다층요격 체계로 조기에 완성
 - ▲ 2단계 :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경우, 실전 배치를 선언할 경우 또는 실전 배치 사실이 밝혀질 경우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술핵무

기 한반도 배치를 미국과 협의

▲ 3단계 : 한국이 요구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어렵게 될 경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도 그 효과가 작동되지 않아 핵억제에 큰 빈틈이 있을 경우 또는 일본이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에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 착수

5. 우리는 핵 개발과정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공장의 생산목표와 북한의 핵 전략가들이 수립하고 핵 전략계획에 관심을 가져야함. 북한은 중국의 1/3수준, 파키스탄의 핵 보유 수준인 100~130개의 핵탄두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에 전체 핵탄두의 20%, 노동미사일에 30%, 무수단미사일에 20%, SLBM과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에 30% 가량의 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보임.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에는 증폭핵분열탄, 그 이상 미사일에는 수소폭탄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위해 북한은 앞으로도 핵탄두 폭발시험과 미사일 성능시험을 계속할 것임.
6. 핵무기 위협 대응에만 너무 함몰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음. 핵무기 위협 하 재래식 무기만을 이용한 제한전쟁이나 모호한 전쟁, 국지도발, 급변사태 대비도 필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존의 군사전략이나 작전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함. 아울러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나 남북관계 정립, 남북통일 문제 등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임.
7. 우리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비록 취약점이 적지 않으나 북한에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가장 좋은 비대칭전력임.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임. 그러므로 사드배치 등 다층요격체계를 갖추려는 과정에서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MD 참여라는 실체와 근거도 없는 프레임에서 간혀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다층방어를 완성시키고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주변국 눈치 보지 말고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미군의 TMD체계와 연계하여 최상의 연합요격체계를 구축해야 함.
8. 우리 군이 독자적 3축 구축을 제시했는데,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는 우리 군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느라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3축 체계는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없지 않음.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 및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개념인데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연계성이 불확실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그러한 엄청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대량응징보복이 공격징후 상태에서 시행되는지 불확실함.
9. 향후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에 정면도전하여 노골적으로 핵 증강을 계속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41조 비군사적인 제재조치만 취할 것이 아니라, 42조 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야 함. 42조는 41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계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임. 군사적 제재조치에는 폭격과 같은 물리적 타격 외에 해상봉쇄나 무력시위도 포함되므로 유엔이 낮은 수준의 제재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0. 조직개편에 대해 의견

- (1) 국가안보실을 기능중심으로 확대개편 필요. 가령, 안보정보, 안보전략, 위기관리 등 3개 기능으로 조직하거나 북한안보, 글로벌안보, 국내안보 등 3개 기능으로 조직하는 방안이 있음. 소요인원은 정부부처에서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면 됨. 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핵 안보비서관을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핵 안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국책 연구기관으로 가칭 ‘핵 대응 연구소’ 설치가 필요.
- (2) 핵전략사령부와 핵 방어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작전을 복잡하게 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갖는 상태에서 합참에서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총괄할 경우 혼란이 발생함. 따라서 전시 공군구성군 사령부에 소속되어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한국군 K2 체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임.



제 2 주제 발제

미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대한민국 안전보장 진단과 대책 자료집

김 현 욱
국립외교원 교수

〈목 차〉

- I. 서 론
- II. 2015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
- III. 현 미국의 대외정책
- IV. 한·미관계 현황
- V. 차기 미국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 VI. 정책적 고려사항



제 2 주제 발제

미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김 현 옥
국립외교원 교수

I 서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점 더 난처해지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자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매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년 말 3/4분기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력 회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및 오일 혁명,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2015년 말에는 국내실업률 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2015년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새로이 갱신하였다. 즉,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강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아시아지역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본 글은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 및 아시아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어 한·미동맹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차기 미 대선후보들의 한반도정책과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15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년 초, 미국에서는 5년 만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백악관에 의해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의 리더십 강조였다. 즉, “현재 미국은 더욱 강해졌고,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잡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다.”라고 서문에 쓰고 있다.¹⁾ 이는 2010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비교하면 큰 변화인데, 2010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키워드

1)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2015_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는 “국내에서 힘을 키우고 해외에서 국제질서를 구축한다.(building at home, shaping abroad)”였다. 2010년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를 배경으로 국제협력을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협상을 통한 관여(engagement), 대결보다는 설득에 입각한 외교를 중시했었다.

2015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먼저 미국의 경제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인데,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초기 미국 실업률은 10%남짓이었으나, 이후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2014년 말 실업률은 5%로 줄어들었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 역시 1조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많은 미국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에너지산업의 붐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상승되었다. 또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종결로 인해 17만 명의 미군병력이 미국본토로 돌아왔으며, 과거 18만 명과 비교해 현재는 15,000명의 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다른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2015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금융위기 회복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리더십이 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위 지정학의 귀환 및 중동정세의 악화로 인해 미국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된다는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 즉, 푸틴의 침공, 중동정세 악화, 중국의 부상 등 다양한 사건들은 현재 미국의 힘이 강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제질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미국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잔 라이스(Susan Rice)가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리더십을 언제 발휘할까? 가 아니라,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이다.

중요한 점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미국 외 지역의 경제성장 중 절반은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동맹국들 및 파트너국들과의 협력강화를 명시하였다. 대 중국정책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와 함께 차이점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과거에 비해 대 중국 견제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대 중국정책은 점점 관여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헷징(hedging)과 관여(engagement)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작년 APEC정상회담에서 보듯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이나 갈등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5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건설적인 관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 증진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한 관찰, 사이버 절도에 대한 필요조치 등 중국과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잔여 임기 동안 미국은 경제력 회복으로 인해 가능해진 힘에 의거

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중 간 경쟁구도는 차기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현 미국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 : 역외균형전략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2014년까지 ‘제한적 개입주의(DDSS)’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즉, 2014년 중간선거 당시 시리아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don't do stupid shit(DDSS)이라는 말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후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철군이 완결되지 않는 동안,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 강경파들로부터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요구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투입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²⁾ 그러나 2015년 이후 대외정책의 새로운 현상은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이다. 즉, 올해 NSS 발간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지역안정을 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가 보인 영역은 대외무역정책이었다. 이미 2010년 하원패배로 인해 오바마 정부는 대외무역 강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며, 자유무역 강화를 통해 미국의 무역흑자를 강화한다는 기조였다. 이에 장애역할을 했던 민주당을 상원에서 공화당이 틀어막아준다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 현 정부는 자유무역기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즉, 시퀘스터 및 국방예산 삭감 등 안보정책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TTIP와 TPP의 임기내 의회비준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 아시아정책 : 대 중국 압박 증가 추세

2015년 이후 미국의 대 중국정책에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나,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규범창설자(rule-setter)

2)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바람: David Rothkopf, "Obama's 'Don't Do Stupid Shit'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June 4, 2014.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미·중관계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익(interest)과 중국의 이익(interest)이 충돌할 경우 중국의 이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양국의 국익이 충돌할 경우 이를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중국의 신장과 티벳에 대한 이익을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바랬으나, 미국은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중국은 2013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나,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주요역할(major role)을 인정하지만, 중국이 체제(system)를 전복(overtun)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중국 중심의 규범과 체제는 국제적 법과 규범을 따라야 하고 이에 순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국의 행동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2015년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남중국해와 AIIB가 주요 사례이다.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는 크게 네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였다. 첫 번째로, 남중국해 인공섬은 단지 바위에 불과하며,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섬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인공섬의 12마일 이내로 미국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 미국은 군대를 보내서는 안되며, 상황을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로, 중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군대를 1회에 한해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네 번째로, 중국과 함께 남중국해 문제는 베트남을 포함 여러 국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며, 단지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미국은 첫 번째 의견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³⁾

AIIB와 관련하여 미국은 AIIB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AIIB의 합법성(legitimacy)에 대해 의문시하는 입장이다. 즉, AIIB의 설립 및 운용이 국제적 기준(standard)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몇 년이 지나 기준에 부합한다고 증명이 될 경우 미국은 AIIB에 가입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올해 가시화된 경제력의 회복과 함께 차기 미정부의 대 중국정책의 본격적인 전개를 위해 정책적 프레임을 형성해 주려는 의도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현재 상호간에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몰래 힘을 키워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되려한다고 인식하고 있

3) 인터뷰, 워싱턴 디씨.

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이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을 억지하려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신형 대국관계는 패권안정이론에 기반한 미국의 시각을 수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안보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은 동맹국들 및 전략적 파트너들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중이다. 즉, 역외균형전략이다. 미국은 공해전투(AirSea Battle) 전략에 의거하여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미·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미·일 간 정보공유, 항공모함 훈련 등이 이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연안전투함을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접근지역저지(AA/AD)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의 군함이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의 연안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미 1998년 일본에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THAAD의 한국 배치를 고려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400시스템의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자국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RCEP, FTAAP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TTIP, 아시아에서 TPP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FTAAP를 추진하다가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의 TPP로 선회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FTAAP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무역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IV 한·미관계 현황

1. 동맹의 전략적 목적

현재 한·미동맹은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을 변환한 이후 꾸준히 공고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글로벌 협력에 있어 그 분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지난 정부 때 시작된 2+2회의가 이제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전략적 목적과 위협인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이 부분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분모를 넓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즉, 미국에게 있어 위협인식은 중국을 포함하나, 한국에게 위협인식은 오직 북한뿐이다. 이에 기반하여 미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표를 아시아지역에 대한 개입 및 중국견제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의 주요 전략

적 목표를 북한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로 보고 있다.

물론 각국의 문서상 전략목적은 서로 양립 가능해 보인다. 즉, 201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의 안보 전략적 목적(security strategic objective)을 안보, 번영,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네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보적 이익으로, 분쟁방지능력구축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북한 도발, 동중국해, 남중국해 긴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을 악화시키는 강제와 단정적 행위를 포기할 것이며, 남중국해 관련 중국과 ASEAN 간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하여, TPP를 통해 미국수출의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높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 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으며 TPP를 통해 개방되고 투명한 경제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과 관련하여, 안정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며, 중국과는 건설적인 관계를 통해 실질적 협력을 증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경제성장,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이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지만, 인권, 사이버경제스파이, 해양안보, 무역, 영토분쟁에 대한 무력행사 등에서 중국이 국제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며, 오해나 잘못된 계산을 줄여나갈 것이고, 중국정부나 기업에 의한 사이버절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2014년 한국 국가안보실에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한·미동맹과 관련되어 안보전략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한국방위를 위한 군사동맹의 역할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의 공식적인 전략목적은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compatible) 보여진다. 2014년 말 열린 2+2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전략적 목적을 확립하는 데 다양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북한과 관련하여 CVID를 위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 없이는 경제발전 추구가 성공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지역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대북억지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3국 정보공유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의미있는 행동규

약(CoC)을 조기에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포함한 역내협력 증진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양국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되었듯이 한·미동맹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시대 구축에 기초하여 역내 도전에 대처해 나갈 것을 인식하였다. 이외에도 글로벌 협력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합의점을 도출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중국해 이슈 등 미국은 한국이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사드(THAAD)배치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역외균형전략에 기반하여 동맹국들의 기여를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계속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구체적 협력 현황

(1)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전략적 유연성

미국은 냉전이후, 그리고 9/11 이후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미군의 지역적 운용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미군은 전작권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자유롭게 자국군을 지역적으로 운용하기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미·일 3자동맹의 필요성이 강해지면서, 미국은 미·일, 한·미동맹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하고 있다. 즉,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 문구를 넣은 것 역시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2014년 2+2회의에서도 중국문제를 언급하였는데,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ASEAN과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2) 방위비분담 (Burden Sharing)

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시퀘스터, 국방비 삭감 등으로 인해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한국에게 국방협력 차원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THAAD의 한국 배치에 이어, 방위비 분담액 증액, KAMD 및 킬체인인 미국 MD와 운용적 통합 등을 점차로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팜: 미국 군사력 배치’라는 보고서에서 팜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미군 전진배치의 전략적 허브로 격상됐으며, 한국이 팜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 위협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동 보고서는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키고 THAAD를 괌에 배치한 점을 들고 있다.⁴⁾

(3) 대북 한미연합 억지능력 구축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의에서 다양한 연합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제44차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WMD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마련에 합의하였다. 즉, 북한이 WMD를 사용하는 방식을 투발수단에 의거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타격수단을 선정 및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 이었으며,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2014년까지 완성기로 합의하였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사일 발사 직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식별-결심-타격할 수 있는 길체인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삼아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합의하였다. 제46차 SCM에서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였으며, 양국군이 전시 한미연합사단을, 평시 연합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기존 시기에 기초한 방식에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양국 국방장관 간 MOU에 명시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미국의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하여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ic Committee)를 창설하였다. 또한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

4) Guam: U.S. Defense Deployments (CRS Reports), October 2014.

V 차기 미국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1. 힐러리 클린턴의 대외정책

(1)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초

힐러리 클린턴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초에 기반하여 미국의 패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미국은 2014년 3/4분기 경제성장률 5%를 기록하였고, 이후 2015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의 리더십이 가능할까?’가 아닌 ‘어떤 방식의 리더십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기존의 제한적 개입주의에서 벗어나 현재 오바마 정부는 역외균형전략을 통해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의 지원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턴의 대외정책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경제 복원에 집중하여 제한적 개입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보다 공세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의 대외정책은 ISIS격퇴를 위해서 여전히 대규모의 지상군 투입에는 주저하고 있으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 중국 견제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클린턴 캠프의 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이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미·중 간 상이함을 인정했으며, 중국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언급한다. 현 미국의 경제력 회복이 점점 부각되고 미국의 대외정책능력이 점점 가시화될 경우, 클린턴의 대 중국정책은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보다는 보다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클린턴 캠프의 다수 인사들이 대 중국 투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같은 경제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으로 인해 보다 유효한 대 중국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2)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리더십 구축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principled leadership)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교, 개발 그리고 경제정책 운영을 통해 위기를 방지하고 안정을 만들며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언급한다.⁵⁾ 그녀는 이 같은 미국 리더십의

틀로써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⁶⁾ 첫 번째는 강한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제력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개방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출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본토안보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반테러 협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한 강한 군대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 이익에 기반한 미국의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인권, 그리고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장기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데, 변화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스마트한 리더십을 언급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란에게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ISIS를 격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라크정부의 군사력을 구축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며, 리비아와 예멘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한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책임을 강조한다. 즉,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사이버스페이스, 인권, 무역, 영토분쟁, 기후변화 등에서 책임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국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과 맞서는 것이다. 힐러리는 유럽 동맹국가들이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고, 봉쇄하며, 억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리더십 구축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의 역할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하고 안전한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6월 2일 국가안보와 관련된 연설에서 그녀는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들 동맹국들과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S의 본거지를 격퇴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과의 폭넓은 연합을 구축할 것을 언급하였다.

(3) 아시아 정책

힐러리 클린턴 본인이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지라 미국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추진되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하여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기구와 규범을 강화하며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규칙(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따라 행동하도록 압박할 것이

5)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DRAFT, July 1, 2016, pp. 25-26.

6) <https://www.hillaryclinton.com/>

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환율조작, 사이버 공격 등에 맞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값싼 철강덤핑 수출에는 대응할 것을 언급한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 중국 견제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 클린턴 캠프의 인사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이 매우 호의적이었고 미·중 간 상이함을 인정했으며 중국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현 미국의 경제력 회복이 점점 가시화되고 미국의 대외정책 능력이 점점 적극적으로 될 경우, 클린턴의 대(對)중국 정책은 현(現)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보다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클린턴 캠프의 다수 인사가 대(對)중국 투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은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있다. 이 같은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으로 인해 추후 대 중국정책은 실제 중국에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주변국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대북정책

북한과 관련하여 클린턴 후보는 현(現) 오바마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추진할 것이며, 북한을 올바른 비핵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에 의해 통치되는 가장 압제적(repressive) 정권으로 묘사하고,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클린턴의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며 북한이 위법적인 핵과 미사일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팀 케인(Tim Kaine) 부통령 후보 역시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했으며,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한,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여 미·중 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오바마 정부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캠프의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정책자문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매우 높다고 언급하였으며, 북한문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란 핵 협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前) 국무차관은 과거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前) 국방부 장관에 이어 대북정

책 조정관을 맡은 바 있다. 차기 정부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그녀는 현(現) 오바마 정부의 대북제재 및 압박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북한 쿠데타 대비 발언까지 한 것을 보면, 현(現) 대북정책이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웬디 셔먼이 지난 5월 CSIS에서 한 연설내용을 통해 차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다. 이란과는 달리 북한정권의 생존은 핵무기에 의존적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고 정권붕괴의 노력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내부경제체제의 외부와의 단절 및 기능장애로 인해 이란식 제재로 인한 비핵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효과적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게 점차 전략적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행동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같은 현상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 배치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압력 속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은 중국이 기대해왔고 중요시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갑작스런 정권붕괴나 쿠데타 등 기대치 않았던 변화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대화 및 협의가 필요하며, 여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웬디 셔먼은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대북전략이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적 군사훈련,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인권문제 중시, 북한 정권붕괴에 대한 공동의 이해, 그리고 진지하고 강력한 외교로 표현된다.”고 언급하였다.⁷⁾

(5) 한·미동맹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지원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상향조정 요구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군 주둔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라는 요구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에 기반을 둔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며, 동맹국들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역외균형전략에 기반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한·미동맹의 지역적 운용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현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가두려는 데 있으며, 미·중 간의 경제적 얽힘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창을 겨누고 찌르지는 못하고

7) https://csis-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160503_WendyShermanLuncheonAddress.pdf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주변국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해징과 개입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점점 외교적 공간이 좁아지게 될 것이다.

2.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정책

(1) 신고립주의 기조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과 달리 매우 예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미국 국민들의 고통과 미국 패권의 약화, 중국의 부상 등을 수정할 방안으로 고립주의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했던 국제주의적 현실주의 기조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주로 경제와 무역에 중점을 둔 대외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수출보조금 제도와 잘못된 노동 및 환경기준에 중지부를 찍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적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의 기업가적 마인드가 깔려있다. 트럼프 본인은 자신이 고립주의자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묘사한다. 즉,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력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미국이 이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시킬 최선책으로 중국에 대한 대미 수출시장 차단을 주장하고 있다.

(2)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정책

트럼프 후보는 4월 27일 워싱턴에서 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제시하였다. 연설 요지는 첫째로, 급진적인 이슬람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ISIS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좀 더 예측 불가능한(unpredictable)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협상가적 관점에서 외교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이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개방이라는 전통적 가치들 때문에 타국인들이 미국의 행동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남중국해 내 중국의 군사시설 확장을 어떻게 견제하겠냐는 질문에도 예측 불가능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미국은 완전히 예측 가능한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답하였다.⁸⁾

8) “We met with Donald Trump. Electing him will still be a radical risk,” *Washington Post*, March 21, 2015.

두 번째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강화이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유리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익에 중심을 두는 외교정책을 강조한다. 러시아와는 반이슬람테러 협력을 통해, 중국과는 무역적자 해소를 통해 양국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외교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로 실용주의 외교팀을 꾸릴 것이며, 서구 가치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⁹⁾

트럼프 후보는 6월 28일 펜실베이니아 주 연설에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미국이익을 중시하는 신고립주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반세계화, 반기득권 정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곱 가지 무역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미국이 TPP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무역팀을 구성한다는 것, NAFTA 재협상할 것,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 외국 무역위반 케이스를 근절하도록 하는 것, 중국의 WTO협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것, 중국이 불공정무역 관행을 계속할 경우 관세부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¹⁰⁾ 또한, NAFTA와 같이 미국의 이익이 타국의 이익에 희생당하는 국제적 연합(international unions)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군사동맹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그는 1987년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공개서한에서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주는 것에 대해 세계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가장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주는 대가로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마무리하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¹¹⁾

(3) 대 중국정책

트럼프는 경제정책 중심의 대(對) 중국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이 경제적 위협이 된다는 점, 위안화 평가절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용해 미국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점이나 중국의 군사력 투사능력 발전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은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공화당 정강에는 미약한 오바마 정부로 인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

9) http://www.nytimes.com/2016/04/28/us/politics/transcript-trump-foreign-policy.html?_r=0

10) <http://www.politico.com/story/2016/06/full-transcript-trump-job-plan-speech-224891>

11) Donald J. Trump, "There's nothing wrong with America's Foreign Defense Policy that a little backbone can't cure: An open letter from Donald J. Trump on why American should stop paying to defend countries that can afford to defend themselves," *New York Times*, September 2, 1987.

으며, 괌 킬러라고 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티벳, 신장에서는 문화적 학살이 지속되고 있으며, 약속된 홍콩의 자치권은 침범되고, 통화는 조작되고, 미국의 기술은 도둑 맞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은 표절판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기업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 탈취라고 언급하였다.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고위 실무책임자를 지낸 아시아 전문가들은 최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게재된 공개서한에서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 공약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순간 아시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은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반(反) 트럼프 입장을 밝혔다.

(4) 대북정책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 미치광이(maniac)같지만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의 무자비한 정권 장악력을 칭찬하였다. 또한, 김정은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유일한 외교 및 경제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그는 미·중 간의 무역관계를 카드로 이용한다면 중국이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 수입물품에 45% 관세부과를 제시하였다.

공화당 정강에 나오는 대북정책은 민주당의 입장과 그리 다르지 않다. 즉,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인권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핵 재앙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한다. 미국은 북한 핵 확산 행위의 완전한 설명과 함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자기 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핵폭발에 의해 생긴 고농도의 전자 방사)를 21세기 위협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북한 핵무기 보유로 인해 전자기 펄스 위협은 현실적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5) 한미동맹

트럼프는 일본, 한국이 자국 내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체결한 많은 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일 안보조약도 불공평한 조약으로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²⁾

12) "In Donald Trump's Worldview, America comes first, and Everybody Else Pays," New York Times, March 26, 2016.

또한, 한국이 매우 부유한 산업국가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 한국이 북한,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나약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관련,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자체 핵개발을 통해 안보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캠프 프워윈장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은 7월 18일 한미FTA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가 오바마 정부가 내세웠던 약속과 비교했을 때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고립주의 성향으로 인해 중국의 패권이 더욱 가능해질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정책이 공화당 전당대회 정강과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트럼프정부가 탄생할 경우 정책적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NATO가 쓸모없다고 한 반면, 공화당 정강은 NATO의 현대화와 공고화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트럼프가 한·일 핵무장을 옹호한 데 비해, 정강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트럼프가 해외주둔 미군철수를 언급한 데 반해, 공화당 정강은 위대한 미국의 역할을 위해 동맹국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트럼프가 푸틴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한 데 반해, 공화당 정강은 러시아의 군사주의가 미국에 위협이라고 언급하였다.

VI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핵문제의 지역화 통한 한·미동맹 지역화 추진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차기 미 힐러리 클린턴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지역화하려는 데 대한 것이다. 한국은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점점 더 핵능력을 고도화시켜가고 있으며, 이는 장거리미사일 능력과 함께 소위 '북한핵위협의 지역화'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 간 전략적 목적을 공동화하는 데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2. 확장핵억지력 강화

2009년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상’ 프라하 연설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을 줄이고 비핵무기체계에 기반하여 핵 억지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에 매우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비핵무기체제로 대응하는 것과, 핵 선제 불사용을 표명하여 적의 핵위협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동맹국들의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

이는 한·미간에도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는데,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한국 내에는 사드(THAAD)로는 부족하다는 논리가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핵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3. 향후 미·중 간 경쟁구도 대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이 강화되면서 향후 미국의 대 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이미 클린턴 캠프 내에는 대 중국정책을 도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으며, 현재 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 중국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있으며, 지금이 중국을 견제할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서로 칼을 찌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사드(THAAD) 배치와 같이 결국 아시아지역의 주변국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인데, 미·중 양국은 주변국들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게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사국들 간에는 칼을 찌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변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요구가 강화될 것이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배짱있는 외교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4. 미 차기 정부의 북·미간 대화에 대비

현재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제재를 대화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현재 대북제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즉, 5차, 6차 핵실험이 진행될 경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해질 경우, 또한 장거리미사일 기술까지 갖춘다면 본토 타격능력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이전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CVID정책을 포기하게 될 경우 NPT체

제와 동맹체제가 모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핵 및 장거리 타격능력 고도화는 중요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물론 현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로 일관할 것이라는 것이 주류이며,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다음 정권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미연에 대비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김 현 욱 교수 (국립외교원 교수)



○ 학력

- ▶ 경기고등학교
-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미 브라운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 경력

- ▶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 ▶ (현) 민주평통 상임위원
- ▶ (전) 통일부 자문위원
- ▶ (전) 미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 (전) 미 UC San Diego 방문교수
- ▶ (전)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 저서

- ▶ “세계화, 테러리즘, 그리고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
- ▶ “Substantiating the cohesion of the post-Cold War US—Japan alliance” 외 다수.

미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이 서 영

국방대 안보대학원 초빙교수

1. 개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대외정책, 현재 미국의 대선정국에서 나타난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기초로 한 차기 미국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한·미안보현안과 미래 한·미동맹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김현욱 교수의 견해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

우리는 지난 60여 년간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한·미FTA 체결 이후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집중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실질적인 북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위중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한미동맹

미국의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클린턴 후보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어 부분적인 정책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한·미동맹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틀과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방위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하듯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재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안보와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크며, 한·미동맹관계에 있어서 한·미 공히 서로가 국가 이익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전쟁억제와 한국방위의 역할을 하는 반면,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아시아의 중요 동맹국이며, 주한미군은 한국방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이어 갈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관계의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인사들의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 부담, 한국·일본 등이 미군주둔 비용분담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군철수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용인 등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미국측 주요 인사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 행정부 관료, NSC 멤버, 상·하원 의회지도자, Think Tank 전문가 등의 정책조언이 많이 반영되고,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펜타곤의 고위관료들이나 장성들의 의견, 현지사령관의 견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한미동맹관계가 과거와 현재에도 공고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대로 굳건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세계의 리더국가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계속되는 정부재정적자, 국방비 감축,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미국민들의 요구에 충족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3. 미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내년 초에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정책결정자들과 주요지도층 인사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한 스탠스를 유지해야만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신뢰를 기초로 안보정책의 지향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유리하다고 본다. THAAD 배치 결정처럼 안보와 국익이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통일 이후의 미래 한미동맹관계를 구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초 군사동맹으로부터 시작된 한·미동맹을 경제·사회·문화 분야와 동북아 및 글로벌 이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은 반드시 필요하며, 강력한 한·미동

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미간에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북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는 지난 20여 년간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식하고, 보다 전향적이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에 해오던 정책을 계속 반복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정권붕괴 및 권력상실의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와 압박 수위를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권붕괴 및 권력상실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한·미간에 추진중인 확장억제정책을 보다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교체(Regime Change), 북한 급변사태 및 붕괴 대비책 강구, 강력한 한·미공조하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및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 그리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미국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키 리졸브(Key Resolve)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연습 등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습 이외에도, 북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관련된 연합훈련, 연합 지상·공중·해상훈련과 연합상륙훈련 등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전·평시 작전수행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다섯째,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협상을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방위비분담을 이유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만약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 보다 많은 방위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재정적자 이유로 동맹국의 분담비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이 예견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에 관한 대응책 수립은 물론, 우리 국민과 국회, 언론 등에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뚜렷한 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북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여 북 핵·미사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우방국의 협력이 긴요하며, 특히 냉철한 관점에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효율적인 작전수행 및 국익에 유리하다고 본다.

일곱째, 한·미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위 레벨로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전략적 소통과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북한정권 붕괴, 미래 한·미동맹, 통일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결 언

우리나라는 북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러시아·일본과 인접해 있다.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와 국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토론 2

미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이 상 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미 대선은 현재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이 유력시되나, 건강 문제 등 막판 돌발변수도 배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조야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전국 단위 및 경합주의 여론조사는 클린턴의 우세와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측의 잇단 선거 전략상 실책과 말실수, 보수진영의 이반 등 대체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금년 9~10월경 막판의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이 승리할 경우 현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과의 차별화보다는 연속성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힐러리는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중요성 강조, 아·태 재균형 지속 및 강화, 고립주의보다는 관여(engagement) 쪽에 무게를 두고, 군사적 수단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에 집중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확립 차원에서 다소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 기조 하에서 새로운 해결을 위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 정부의 대화 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호응이 없거나 또 다시 도발할 경우 정권교체를 포함하는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정치에서는 각종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 대폭 확대, 부유층 증세 등 이른바 진보적 ‘신자유주의’ 성향의 국내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승리시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제적 개입,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의 방위분담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제2의 닉슨쇼크’를 맞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외경제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 전면 도입을 주장할 전망이다. 국내정치에서는 중산층, 제조업 위한 감세 및 강력한 반이민정책 채택, 불법 이민자와 무슬림 유입 차단 등 매우 파격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대외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클린턴, 트럼프 모두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가 거의 확실시된다. 글로벌 거시경제 조정국면이 장기화될 전망 가운데 차기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으로 인한 한·미간 무역마찰 증가가 예상된다. 미 의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 비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미 FTA 이행조치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요구가 증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좀 더 크게 보면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이 갈수록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미 재계와 업계에 대한 접촉, 소통 확대가 시급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동맹협력을 저해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이 경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그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문제는 TPP 참여 성사 여부와 밀접히 연관될 뿐 아니라 안보적 함의가 크기 때문에 한국이 가능한 신속히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미동맹의 전반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사안을 둘러싼 인식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북아 역내 문제에 대한 인식 격차, 특히 사드 배치, 남중국해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있어서 한·미간 온도차가 감지되는 바, 동맹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평가 및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 차기 정부와의 조율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 차기 정부는 아마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검토한 바탕 위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치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진화하는 핵 독트린에 따라 북핵으로 인한 불안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핵 못지않게 비대칭·재래식 전력의 위협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대북제재는 북핵 진전 지연 효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북제재의 출구전략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① 북핵 공조 강화, ② 확장억지 강화, ③ 한국군 현대화, ④ 지역 군사협력 확대 등 4대 중점 협력과제에 유의하는 가운데,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가급적 신속히 완결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내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며,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은 향후 정치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 존재하는 바,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되지는 않겠지만 미 대선결과에 따른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국내정치 일정(대선)과 정권 변동 가능성에 따라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보협력과 관련, 미국은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지역안보 역할 확대를 희망하나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는 한편, 한·일간 국내 정치적 민감성 탓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중국 문제와 관련 솔직한 대화 및 한·미간 단합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소개

사단법인 한국융합안보연구원(KCSI)은 융합안보의 철학과 개념에 기반을 둔 안보 정책 개발의 新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구현하기 위해, 2015년 10월에 설립된 새로운 안보분야 싱크탱크입니다.

대표(이사장) : 이 흥 기 (정치학 박사, 예비역 대장)

■ 미래 비전

1. 미래의 다차원적 위협에 대응할 국가안보 정책을 창출하는 창조적 싱크탱크
2.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3. 융합안보 학제를 창제하여 리드하는 선구적 싱크탱크

■ 주요사업

1. 융합안보이론 체계 정립 및 융합 안보정책 연구, 개발
2. 융합안보 인재 발굴 및 육성
3. 각종 안보정책 수요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
4. 안보교육 관련 학습과정 및 연구포럼 설치, 운영
5. 세미나, 학술교류 등 다양한 학술활동과 안보강연 활동 전개
6. 정기 및 수시 간행물 발간 및 배포
7.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연구조직 : 연구원 산하 2개 실과 5개 연구센터 및 1개 교육센터 편성, 운영 중

홈페이지 : www.kcsi.or.kr (포탈검색어 :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407호(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전화번호 : 02-2135-3669 Fax : 02-2135-3668